

2014년 정책연구과제

# 사회적 자원 개발을 위한 인천광역시 자활기업 현황 연구

이용갑



## 연구진

연구책임

이용갑 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 본 연구결과는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차례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II. 자활기업 조사 방법 .....	5
1. 설문조사지 .....	5
2. 설문조사 .....	6
III. 자활기업 조사 결과 분석 .....	7
1. 인천광역시 자활기업 전체 현황 .....	7
2. 2014년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업의 일반 현황 .....	15
3. 자활기업의 인적 구성 및 매출현황(2009/2010~2013/2014년) .....	22
4. 자활기업의 사회적 자원 및 생존전략 .....	35
IV.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 .....	47
1. 자활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지원 방안 .....	47
2. 인천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 .....	50
참고문헌 .....	57

# 표 차례

<표 1> 2014년도 인천광역시 자활기업 현황, 사회적 자원 및 전망 조사의 영역 및 항목	5
<표 2> 2001년~2014년 상반기 동안 자활기업의 현재 상태	12
<표 3> 자활기업의 합병 사유	12
<표 4> 자활기업의 폐업 사유	12
<표 5> 합병 및 폐업 후 자산처리(복수응답)	13
<표 6> 2014년 상반기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업 구분*	13
<표 7> 자활기업의 설립 사유	15
<표 8> 업종 별 기업의 설립사유*	15
<표 9> 자활기업의 법적 조직 형태	16
<표 10> 기업구분 별 자활기업의 법적 조직형태*	17
<표 11> 업종 별 자활기업의 법적 조직형태*	17
<표 12> 조직형태의 이유	18
<표 13> 법적 조직형태 별 조직형태의 이유*	18
<표 14> 자활기업의 사회적 인증 현황	19
<표 15> 2014년 상반기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현황	19
<표 16> 업종 별 사회적 인증 현황*	20
<표 17> 업종 별 사회적 인증 이유*	20
<표 18> 자활기업의 사무실과 작업실 임대 현황	21
<표 19> 자활기업 참여자의 구성*	22
<표 20> 지역/광역 자활기업 구분 기준 자활기업의 참여자 구성	24
<표 21> 사회적 인증 기준 자활기업의 참여자 구성	25
<표 22> 업종 및 소득계층 별 참여자 구성 (2014년)	26
<표 23> 성별 기준 자활기업 참여자 구성	27
<표 24> 업종 별 자활기업 참여자의 남녀 구성	28
<표 25> 업종 별 자활기업의 평균 창업자금*	29
<표 26> 인천광역시 자활기업의 수지현황	30
<표 27> 지역/광역기업 구분 기준 자활기업의 수지현황	30
<표 28> 사회적 인증 기준 자활기업의 수지현황	31
<표 29> 업종 기준 자활기업의 연도별 평균 매출액	32
<표 30> 자활기업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33
<표 31> 자활기업 지원 사유	34
<표 32> 자활기업의 시장상황에 대한 자체 평가*	35
<표 33> 업종 별 자활기업의 시장상황에 대한 자체 평가*	36
<표 34> 기업구분 자활기업의 2013년 시장매출분포	37
<표 35> 업종 별 자활기업의 2013년 평균 매출액	37
<표 36> 자활기업의 주요 교육기관 (1순위)	38

<표 37> 자활기업의 주요 사업지원 및 자문 기관 (1순위) .....	39
<표 38> 업종 기준 자활기업의 사업지원 및 자문 기관* (1순위) .....	39
<표 39> 자활기업의 후원기관 (1순위) .....	40
<표 40> 자활기업의 향후 3년 생존에 대한 전망 .....	41
<표 41> 업종 별 자활기업의 향후 3년 생존 전망* .....	41
<표 42> 자활기업에 대한 지역자활센터의 평가* .....	42
<표 43> 업종 기준 자활기업에 대한 지역자활센터의 평가 .....	43
<표 44> 자활기업의 생존을 위해 향후 필요한 지원의 종류 (1순위) .....	44
<표 45> 업종 기준 자활기업의 생존에 필요한 지원의 종류 .....	45
<표 46> 사회적 경제에 참여 중인 자활기업 .....	53

# 그림 차례

<그림 1> 기준 2001년~2014년 상반기 자활기업 설립 규모 .....	7
<그림 2> 지역자활센터 기준 2001년~2014년 상반기 자활기업 설립 규모 .....	8
<그림 3> 업종 기준 2001년~2014년 상반기 자활기업 설립 규모 .....	8
<그림 4> 연도별 자활기업의 폐업·합병 기업 수 .....	9
<그림 5> 업종별 자활기업의 폐업·합병기업 수 .....	9
<그림 6> 연도별 운영 중인 자활기업 규모 .....	10
<그림 7> 지역자활센터 기준 2014년 상반기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업 규모 .....	11
<그림 8> 업종 기준 2014년 상반기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업 규모 .....	11

# 연구요약

## I. 연구개요

- 본 연구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취·창업지원을 위한 인천광역시 소재 자활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그 첫 단계로 자활기업 전체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자활기업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
  - 인천광역시 자활기업의 성장
  - 2014년 상반기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업의 현황
  - 2009/2010년~2013/2014년 자활기업의 인력 구성 및 매출
  - 2014년 상반기 현재 자활기업의 사회적 자원 및 생존 전망
  - 자활기업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제언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소재 11개 지역자활센터가 작성한 해당 센터가 창업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자활기업에 관한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함.
  - 첫째, 2009년부터 조사시점인 2014년 6월 30일까지 설립, 합병 및 폐업된 자활기업에 대한 조사
  - 둘째,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설립, 합병 및 폐업된 자활기업에 관한 조사

## II. 연구결과

- 2014년 상반기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업의 규모
  - 2014년 상반기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업의 규모
    - 2001년부터 2014년 상반기에 설립된 자활기업 77개 기업 중 2014년 6월 30일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업은 50개 기업임.
  - 지역자활센터 기준 2014년 상반기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업의 규모
    - 남동지역자활센터와 부평지역자활센터가 7개 기업,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가 6개 기업, 계양·연수구·중구 지역자활센터가 각각 5개 기업임.

- 반면에, 남구미추출지역자활센터는 1개 기업, 서구지역자활센터는 2개 자활 기업이 운영 중임.

○ 업종 기준 2014년 상반기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업의 규모

- 청소 17개, 집수리 9개, 폐자원활용 6개, 제조업 4개 기업 등임.

○ 지역/광역 자활기업 구분

- 2014년 6월 30일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50개 자활기업 중 지역기업은 45개,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인 광역기업은 5개임.

○ 사회적 인증/비인증 자활기업 구분

-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 인증을 받은 자활 기업은 19개이며, 사회적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은 31개임.

- 5개 광역기업 중 사회적 인증을 받은 경우는 예비 사회적 기업 1개소, 사회적 기업 1개소 및 협동조합 1개소 등 총 3개 광역기업임.

□ 2014년 상반기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업의 일반 현황

○ 자활기업의 설립

- 2014년 상반기 현재 운영 중인 50개 자활기업의 설립 사유를 분석하면, 74.0%인 37개 자활기업은 참여자의 자활·자립을 위해서, 8.0%인 4개 자활 기업은 자활사업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설립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 기준 자활기업의 설립

- 모든 업종에서 '참여자의 자활·자립'이 가장 많았으며, '간병', '택배', '기타(영농)' 업종의 각 1개 기업이 '사업의 시장성'을 이유로 자활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남.

○ 자활기업의 법적 조직 형태

- 50개 자활기업의 법적 조직형태는 주식회사가 18개소, 개인사업자가 17개소이며, 협동조합은 5개소임.

○ 기업구분 기준 자활기업의 법적 조직 형태

- 지역기업과 광역기업은 전체 자활기업의 경우와 같이 개인사업자(40.0%) 및 주식회사(40.0%) 형태로 등록된 경우가 대다수임.

- 사회적 인증을 받은 자활기업은 주식회사 형태가 절대 다수(73.7%)인 반면에, 사회적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58.6%임.



- 업종구분 기준 자활기업의 법적 조직 형태
  - ‘청소’는 17개 기업 중 11개 기업이 주식회사 형태이며, ‘집수리’는 9개소 중 개인사업자가 3개 기업, 공동사업자와 협동조합이 2개 기업임.
- 법적 조직 형태의 이유
  - 자활기업들이 현재와 같은 조직형태를 갖게 된 이유 중 15개 기업은 ‘인증조건 충족’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참여자의 책임성’이 11개 기업, ‘지침 준수’와 ‘설립의 편의성’ 및 ‘운영의 편의성’이 각각 7개 기업임.
- 자활기업의 사회적 인증 현황
  - 50개 자활기업 중 사회적 인증을 받은 기업은 모두 19개 기업임.
  - 이 중 ‘사회적기업’이 10개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이 6개 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3개 기업임.
  - 전체적으로 공공시장 진입이 필요한 청소업종이 사회적 인증을 가장 많이 받아서, 청소 업종 17개 자활기업 중 (예비) 사회적기업은 2개 기업, 사회적기업은 6개 기업, 협동조합이 1개 기업임.
  - 자활기업이 사회적 인증을 받는 이유는 66.7%(12개 기업)가 ‘(공공시장에서) 사업수행의 유리함’을 제시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수요확대가 자활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청소가 대표적임.

## □ 자활기업의 인적 구성

- 자활기업의 인적 구성
  - 2009년 자활기업 참여자 234명 중 30.8%인 72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으며, 차상위계층은 23.5%, 일반인은 42.7%인 100명, 기타 인원이 3.0%인 7명이었음.
  - 그러나, 2014년 전체 참여자는 598명으로 증가하였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각각 28명, 18명 증가한 것에 그친 반면, 일반인은 288명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그 결과, 자활기업 참여자 비율도 2014년에는 일반인이 전체 참여자의 약 65%를 차지하였으며, 수급자는 16.7%, 차상위계층은 12.2%로 2009년에 비해 자활기업에 참여한 일반 계층의 비율이 높게 증가하였음.
- 지역/광역기업 구분 기준 자활기업의 인적 구성
  - 전체적으로 지역기업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광역기업에 일반인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음.

○ 사회적 인증 기준 자활기업의 인적 구성

- 전체적으로 사회적 인증을 받지 않은 자활기업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사회적 인증을 받은 자활기업에는 일반인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음.

○ 업종 및 소득계층 기준 자활기업의 인적 구성

- 자활기업 참여자 중 청소년의 경우 62.7%, 간병은 83.5%, 장기요양은 84.1%가 일반인임.

○ 자활기업의 남녀 구성

- 2009년의 경우 전체 234명 중 남성이 39명으로 16.7%, 여성이 195명으로 83.3%를 차지함으로써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2014년에도 남성 23.2%, 여성 76.8%으로 성비 불균형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여성의 비중이 크게 높음.

□ 일반/공공시장에 대한 평가 및 거래 현황

○ 시장상황에 대한 자활기업의 자체 평가

- 2014년 상반기에 운영 중인 자활기업 50개소가 자신들이 참여하는 시장의 상황에 대한 전망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는 일반시장 상황은 2.47, 공공시장 상황은 2.67로 모두 보통(3.0)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업종 기준 시장상황에 대한 자활기업의 자체 평가

- ‘택배’가 일반시장은 평균 3.17, 공공시장은 3.00으로 가장 높게 평가함.
- 반면에, ‘폐자원재활용’은 일반시장 평균 1.50, 공공시장 평균 2.00로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음.
- 또한, 업체 수가 가장 많고, 사회적 인증을 받은 업체도 가장 많으며, 고용된 인력도 많은 ‘청소’업종은 일반시장 평균 2.29, 공공시장 평균 2.65로 전체 평균과 가장 유사하여, 시장전망이 밝지만은 않음.

□ 자활기업의 지역 자원

○ 자활기업의 교육기관

- 2014년 상반기에 운영 중인 자활기업이 첫 번째로 선호하는 교육기관으로 ‘지역자활협회 및 센터’를 선택한 규모는 22개 기업으로 가장 많음.

-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기업진흥센터’를 선택한 경우가 8개 기업, ‘자체 교육’을 선택한 경우도 8개 기업임.

○ 자활기업의 사업지원 및 자문 기관

- 2014년 상반기에 운영 중인 자활기업의 절반 이상은 ‘지역자활센터나 협회’로부터 사업지원이나 자문을 받음.
- 지역자활기업과 사회적 인증을 받지 않은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나 협회’에서 사업지원이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절대 다수인 반면에, 광역자활기업은 ‘중앙자활센터나 광역자활센터’, 사회적 인증기업은 ‘지역자활센터나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사업지원이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절대 다수임.

○ 자활기업의 후원기관

- 자활기업을 후원하는 단체는 자활기업의 구분과 관계없이 ‘지역자활협회 및 센터’가 22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협력업체’를 선택한 자활기업은 7개, ‘지자체’를 선택한 자활기업은 4개 등임.

□ 자활기업의 향후 3년에 대한 생존 전망

○ 자활기업의 향후 3년에 대한 생존 전망

- 2014년 상반기에 운영 중인 자활기업들이 향후 3년의 생존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자체 평가한 결과, 보통(3)과 나쁘다(2) 사이의 2.76으로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게 전망하고 있음.
- 광역기업과 사회적 인증기업은 보통(3)이상으로 전망하는 반면에, 지역기업과 사회적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은 보통(3) 미만으로 전망하고 있음.
- 특히, 사회적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향후 3년에 대하여 긍정적이지 않게 전망하고 있음.

□ 자활기업에 대한 지역자활센터의 내부 평가

○ 자활기업에 대한 지역자활센터의 내부 평가

- 자활기업에 대한 5점 척도 기준 지역자활센터의 평가는 매출현황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보통(3)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참여자의 열의와 직무능력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지역기업은 매출현황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보통(3)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참여자의 열의와 직무능력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반면에, 광역기업은 참여자의 직무능력과 열의를 보통(3) 이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전반적인 평가, 리더십 및 매출현황에 대해서는 나쁨(2) 수준에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가장 부정적임.
- 사회적 인증 기업의 경우는 지역기업과 유사하게 매출현황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보통(3)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가장 긍정적임.
- 반면에, 사회적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광역기업과 유사하게 참여자의 직무능력과 열의를 보통(3) 이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전반적인 평가, 리더십 및 매출현황에 대해서는 나쁨(2) 수준에서 평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역기업과 사회적 인증기업은 매출, 광역기업과 사회적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은 리더십과 매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 자활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지원

##### ○ 자활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지원

- 2014년 상반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활기업들을 대상으로 자활기업의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을 확인한 결과, ‘공공시장 참여 지원’을 선택한 경우가 26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대표의 리더십 배양을 위한) 인적 자원 지원’을 선택한 경우가 9개였음.
- 광역기업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자활기업은 ‘공공시장 참여 지원’을 향후 생존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1순위로 제시한 반면에, 광역기업의 절반은 대표의 ‘리더십 배양이라는 인적 자원 지원’을 1순위로 제시하고 있음.

#### □ 인천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 모색

##### ○ 첫째, 자활기업의 범주화 및 범주별 사회적 자원의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 모든 자활기업을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지자체차원에서 자활기업을 지역/광역이라는 활동범위, 업종, 사회적 인증 여부, 소재 지역 및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비율 등을 기준으로 범주화하여, 각 범주에 적합한 자원의 연계가 필요함.

##### ○ 둘째, 조례에 자활기업 지원 명시 및 지자체가 구매하는 공공시장에 자활기업의 참여를 위한 지침서 개발

- 자활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지원이 조례에 규정되고, 담당공무원 및 자활기업 관련자들이 지자체가 구매하는 공공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지침서가 있을 때

자활기업의 공공시장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됨.

- 셋째, 다양한 업종에서 자활기업의 사회적 인증 획득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성화
  - 자활기업에서 사회적 인증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제공되지 않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결성이나, 타 업종에서의 사회적 인증이 활발하지 않음에 따라, 자활기업의 사회적 경제로의 적응은 다양한 업종에서 자활기업의 사회적 인증 획득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함.
  - 특히, 지역자활센터나 대표자 본인이 운영의 책임을 지는 법적 형태가 아니라, 참여자 모두가 조합원이 되어 모두 함께 책임을 나누어 가지면서 본인이 참여하는 자활기업에 대한 열정과 책임이 강화되는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의 전환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넷째, (전자)바우처와 결합된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기존의 자활사업을 자활기업으로 창업
  - (전자)바우처와 결합된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기존의 자활사업을 자활기업으로 창업하는 노력이 필요함.
- 다섯째, 자활기업 대표뿐만 아니라 참여자 모두의 직무능력과 책임감 제고
  - 현재의 법적 구조는 대표자가 경영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자활기업 대표자의 리더십 배양을 내용으로 하는 인적 자원 지원'이 자활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 중의 하나임.
  - 또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결성이 확대된다면, 리더뿐만 아니라 참여자 모두의 직무능력과 책임감 제고가 필요함.
- 여섯째, 자활기업 범주화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서 '지자체-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 자활기업을 지역/광역이라는 활동범위, 업종, 사회적 인증 여부, 소재 지역 및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율 등을 기준으로 범주화하고, 범주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자활기업 범주화 및 맞춤형 지원체계는 광역자활센터가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의 도움을 받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자활기업에 대한 실제 지원은 지역자활센터가 지자체와 함께 하는 역할분담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

**표제어 : 자활기업, 사회적 경제, 광역자활센터, 공공시장, 리더십**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 자활사업 성과 측정의 문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인 자활사업의 성과는 두 가지 지표로 측정될 수 있음.
- 첫 번째 지표는 전체 자활사업 참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탈수급자의 비율인 ‘탈수급률’임.
  - 탈수급률은 산출되기 시작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음(보건복지부, 2012).
- 두 번째 지표는 자활사업에서 취·창업 등 근로연계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탈수급률’을 대신하는 지표로 개발된 ‘자활성공률’임.
  - 전체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중 탈수급자 및 취·창업자를 합산한 비율인 ‘자활성공률’은 2007년 14.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21.8%로 ‘탈수급률’보다 약 2배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산출됨(보건복지부, 2012).
- 하지만, 두 가지 지표 모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음
  -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연령, 기술력 부족, 자본 부족 등으로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창업도 쉽지 않다고 평가 받고 있음.
  -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자활사업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중앙정부가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광범위하게 실시한 결과이기도 함.

### □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 자활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것은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시작한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임.
- 자활기업으로 인정된다면 기본 2년, 최장 3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음(보건복지부, 2014).
  - 창업 지원, 사업자금의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 하지만,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활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제안

- 자활연구자들이나 자활 현장 실무자들의 제안
  - 사업투자방식의 도입
  - 사회적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자활기업 지원
- 자활정책연구소의 제안<sup>1)</sup>
  - 자활사업제도의 변화
  - 지자체의 명시적인 제도적 지원
  - 민간부문 전달체계간 역할 분담
  - 자활기업의 다양한 경로 모색
  - 프랜차이즈화의 추진
  - 자활기업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창출

#### □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원에서 저소득·취약계층의 취·창업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수행되는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은 무엇보다도 자활기업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함.
  - 자활기업의 매출이 안정적일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자리가 유지되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앞서 언급한 자활기업의 창업과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은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1) 김정원 외, 사회적 경제와 자활기업, 자활정책연구소, 2012

- 이에 더하여, 자활기업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외부 자원과 연계를 확대하여 다양한 사업 분야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자활기업을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공공시장을 개척하여, 공익성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유지하는 것이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자활기업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자원 분석의 필요성

- 저소득·취약계층의 취·창업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자활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자활기업을 둘러싼 사회적 자원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하지만, 자활기업을 둘러싼 사회적 자원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자활기업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이에 본 연구는 자활기업의 창업 및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인천광역시 소재 11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자활기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1년부터 자활기업의 성장, 2014년 6월 30일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업의 현황과 매출, 그리고 자활기업을 둘러싼 환경과 생존에 대한 평가와 지원을 분석하고자 함.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자활기업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라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하나의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취·창업지원을 위한 인천광역시 소재 자활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그 첫 단계로 자활기업 전체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자활기업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2) 연구의 내용

- 인천광역시 자활기업의 성장
- 2014년 상반기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업의 현황
- 2009/2010년~2013/2014년 자활기업의 인력 구성 및 매출
- 2014년 상반기 현재 자활기업의 사회적 자원 및 생존 전망
- 자활기업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제언

### 3) 연구의 방법

- 문헌분석
  - 사회적 경제 및 자활기업 분석
- 설문조사
  - 2009년부터 조사시점인 2014년 6월 30일까지 설립, 합병 및 폐업된 자활기업에 대한 조사
  -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설립, 합병 및 폐업된 자활기업에 관한 조사

## II 자활기업 조사 방법

### 1. 설문조사지

#### □ 설문조사지의 구성

##### ○ 두 종류의 설문조사지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소재 11개 지역자활센터가 작성한 해당 센터가 창업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자활기업에 관한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함.
- 첫째, 2009년부터 조사시점인 2014년 6월 30일까지 설립, 합병 및 폐업된 자활기업에 대한 조사
  - 지역자활센터에 해당 자활기업에 관한 자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개별 자활기업의 일반 현황, 매출액과 지원 현황, 시장상황과 지역자원 및 향후 전망 등을 확인하는 조사임(<표 1>).
- 둘째,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설립, 합병 및 폐업된 자활기업에 관한 조사
  - 이 기간 동안 설립된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자활기업 명칭, 업종, 설립일, 유지·합병·폐업과 같은 현황을 연도별로 조사함.

<표 1> 2014년도 인천광역시 자활기업 현황, 사회적 자원 및 전망 조사의 영역 및 항목

영역	조사 항목
I. 기본 현황	대표 센터, 자활기업 명칭, 지역 구분(지역/광역/전국 자활기업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 현 상태(유지존속, 합병, 폐업), 업종, 연락처, 주소, 사업 내용, 설립사유, 합병/폐업(합병/폐업의 종류, 사유 및 사후 자산처리), 참여자 구성(전체 규모 및 남/여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일반인/타 프로그램 지원 인원 구분), 법적 조직(법적 형태 구분과 이유), 사회적 인증(인증 현황 및 이유), 사무실/작업실 임대 현황
II. 세부 현황	창업 자금(총액 및 구성), 수지 현황(매출액, 인건비, 사업비), 지원 현황(인건비/사업비/물품 지원 구분 및 금액)
III. 환경 및 생존전망	시장 상황(일반/공공 시장) 평가, 일반/공공 시장의 2013년 매출액, 지역자원분석(교육기관, 사업지원/자문 기관, 후원기관), 향후 3년의 전망, 자체 평가(전체 평가, 대표의 리더십, 참여자의 직무능력, 참여자의 열의, 매출), 생존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종류

- 두 종류 설문조사 결과의 연계하여 인천 자활기업 전체의 성장과 현황 분석
  - 두 종류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자활기업의 명칭, 업종, 지역자활센터 및 현황

을 연결하면, 2001년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인천광역시 소재 자활기업의 성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음.

○ 설문지 작성

- 두 종류의 설문조사지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이번 조사를 위한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대표자 및 인천광역자활센터 실무자와 함께 작성 후, 각 지역자활센터의 실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검토하고,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작성된 것임.

## 2. 설문조사

□ 설문조사 및 수정

○ 조사 과정

- 작성된 설문조사지는 인천광역자활센터가 11개 지역자활센터에 이메일로 발송하여, 각 센터의 자활기업 담당자와 실장들이 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한 후 인천광역자활센터로 회신함.
- 인천광역자활센터는 회수된 설문조사지를 인천발전연구원과 함께 검토한 후 각 지역자활센터에 수정·보완을 요청함.
- 인천발전연구원은 최종적으로 회수된 설문조사지를 입력한 후 통계분석한 후 지역자활센터 실장회의에서 이 자료를 산출하여 검토한 후 다양하게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음.

□ 조사결과 분석

○ 조사결과 분석의 구성

- 두 종류의 설문조사지를 연결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구성된 분석결과를 구성함.
  - 첫째, 2001년부터 2014년 6월 30일 현재 인천광역시 소재 자활기업 전체의 현황,
  - 둘째, 2014년 6월 30일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업의 일반 현황,
  - 셋째, 2009년부터 2013년, 또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었거나 운영 중인 자활기업 참여자의 구성, 창업자금, 수지 현황 및 외부 지원
  - 넷째, 2014년 6월 30일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업의 둘러싼 시장상황, 지역 자원 및 향후 3년의 생존 전망

### III 자활기업 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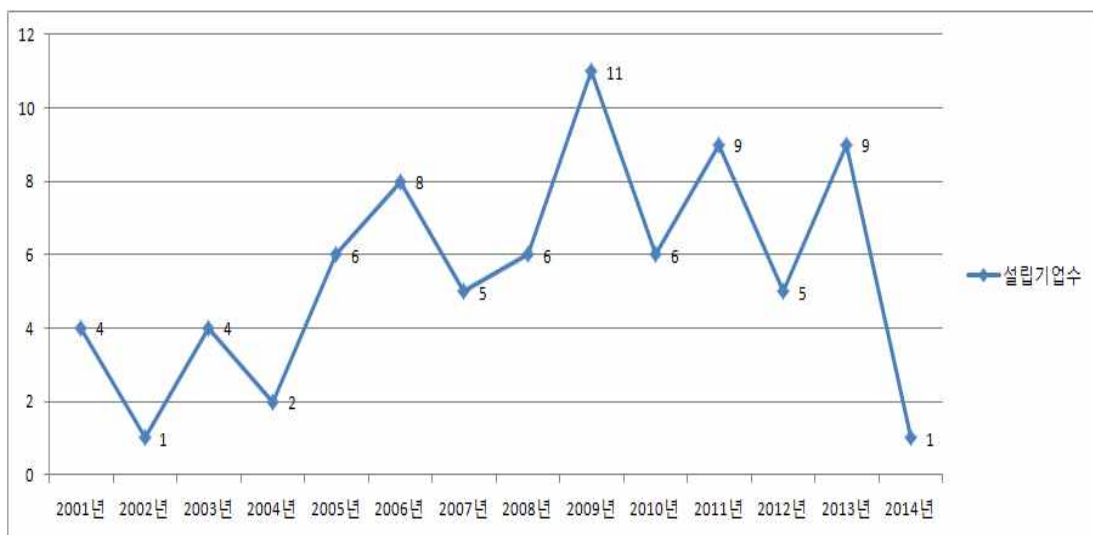
#### 1. 인천광역시 자활기업 전체 현황

##### □ 2001년~2014년 상반기까지 자활기업의 설립 규모

##### ○ 자활기업의 설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효이후 인천광역시에서 자활기업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모두 77개 자활기업이 설립되었음(<그림 1>).
- 2001년에는 4개소가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자활기업의 설립 규모는 지그재그이지만 2009년 11개 기업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지그재그형태로 설립 규모는 감소하였다.
- 그 결과 2011년과 2013년에 각각 9개 기업이 설립되었으나, 2010년에는 6개 기업, 2012년에는 5개 기업이 설립되었을 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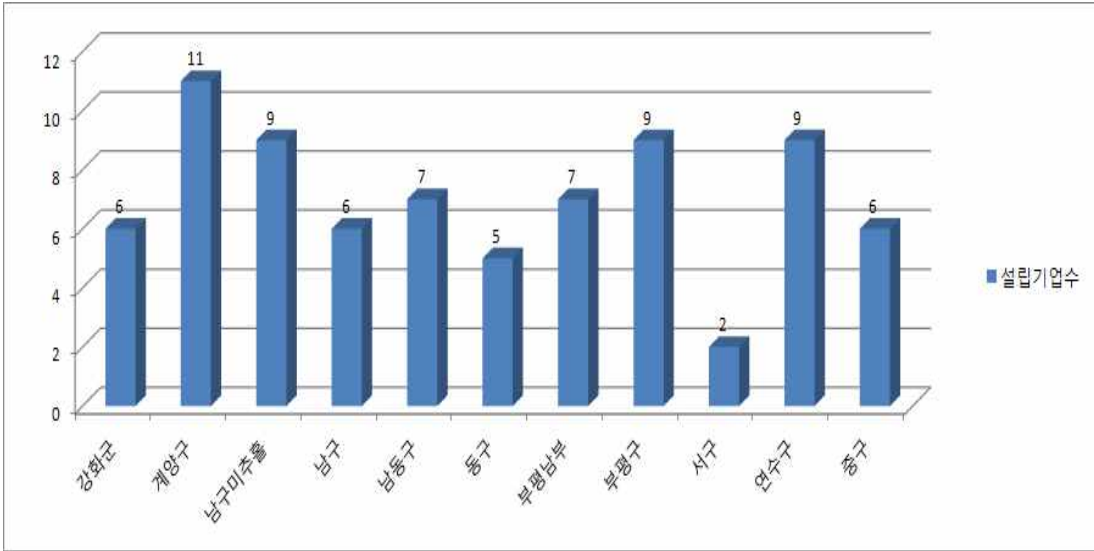
<그림 1> 기준 2001년~2014년 상반기 자활기업 설립 규모



##### ○ 지역자활센터 기준 자활기업의 설립 규모

- 지역자활센터 기준으로는 계양센터가 11개 자활기업으로 가장 많고, 서구센터가 2개 자활기업으로 가장 적은 규모임(<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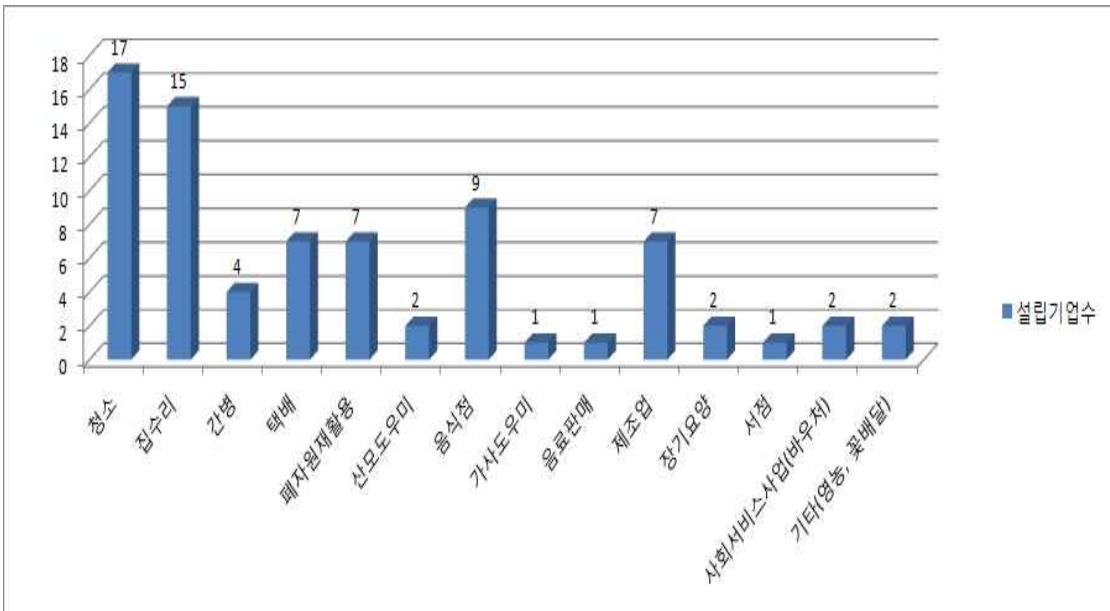
<그림 2> 지역자활센터 기준 2001년~2014년 상반기 자활기업 설립 규모



○ 업종 기준 자활기업의 설립 규모

- 2001년~2014년 상반기에 설립된 자활기업을 업종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청소가 17개소로 가장 많음(<그림 3>).
- 그 다음으로 집수리가 15개 기업, 음식점이 9개 기업, 택배, 폐자원활용, 제조업에서 각각 7개 기업의 자활기업이 설립되었음.

<그림 3> 업종 기준 2001년~2014년 상반기 자활기업 설립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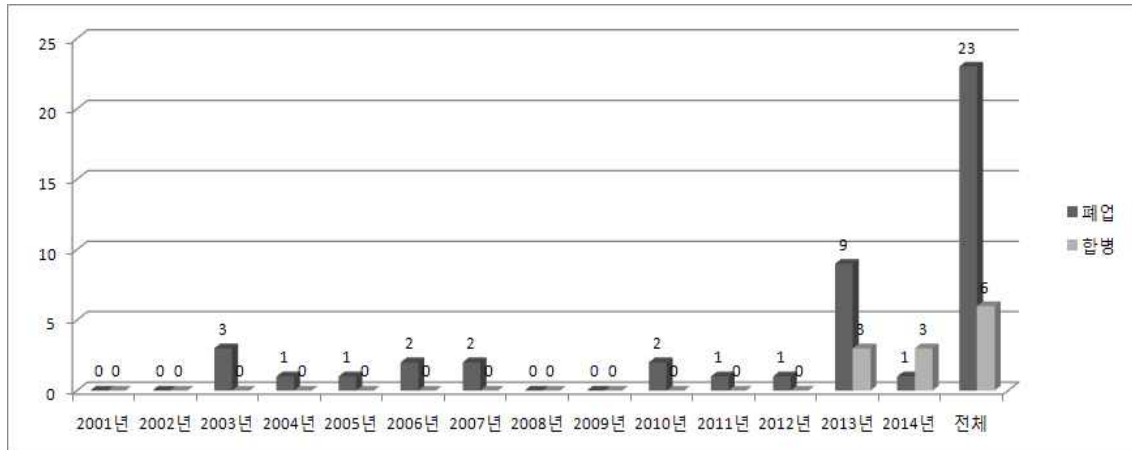


□ 2001년~2014년 상반기까지 자활기업의 폐업 및 합병

○ 자활기업의 폐업 및 합병

- 2001년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설립된 77개 자활기업 중 폐업한 곳은 23개 기업, 합병이 이루어진 자활기업은 6개 기업임(<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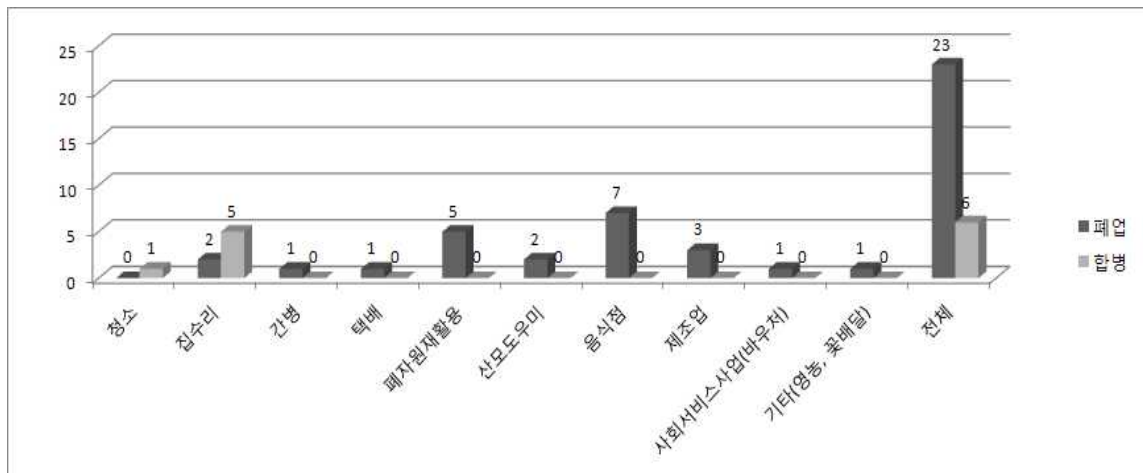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자활기업의 폐업·합병 기업 수



○ 업종 기준 자활기업의 폐업 및 합병

- 폐업한 자활기업의 업종은 음식업이 7개 기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폐자원활용이 5개 기업, 제조업이 3개 기업이었음(<그림 5>).
- 반면에, 합병이 이루어진 자활기업의 업종은 집수리업이 전체 합병기업 6개 기업 중 5개 기업이었고, 나머지 1개 기업은 청소였음(<그림 5>).

<그림 5> 업종별 자활기업의 폐업·합병기업 수



□ 2014년 상반기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업의 규모

○ 2014년 상반기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업의 규모

- 2001년부터 2014년 상반기에 설립된 자활기업 77개 기업 중 2014년 6월 30일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업은 50개 기업임(<그림 6>).<sup>2)</sup>
- 이는 최대 규모였던 2012년 54개 기업에서 2013년 9건의 폐업과 3건의 합병 및 2014년의 1건의 폐업과 3건의 합병 결과임.

<그림 6> 연도별 운영 중인 자활기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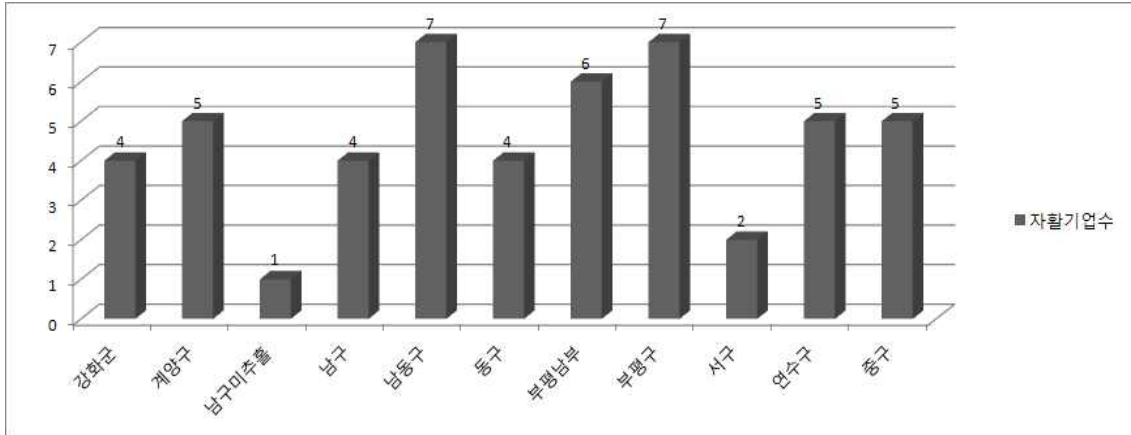


○ 지역자활센터 기준 2014년 상반기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업의 규모

- 남동지역자활센터와 부평지역자활센터가 7개 기업,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가 6개 기업, 계양·연수구·중구 지역자활센터가 각각 5개 기업임(<그림 7>).
- 반면에, 남구미추출지역자활센터의 경우는 1개 기업, 서구지역자활센터는 2개 자활기업이 운영 중임.

2) 50개 자활기업 중 1개 기업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지만,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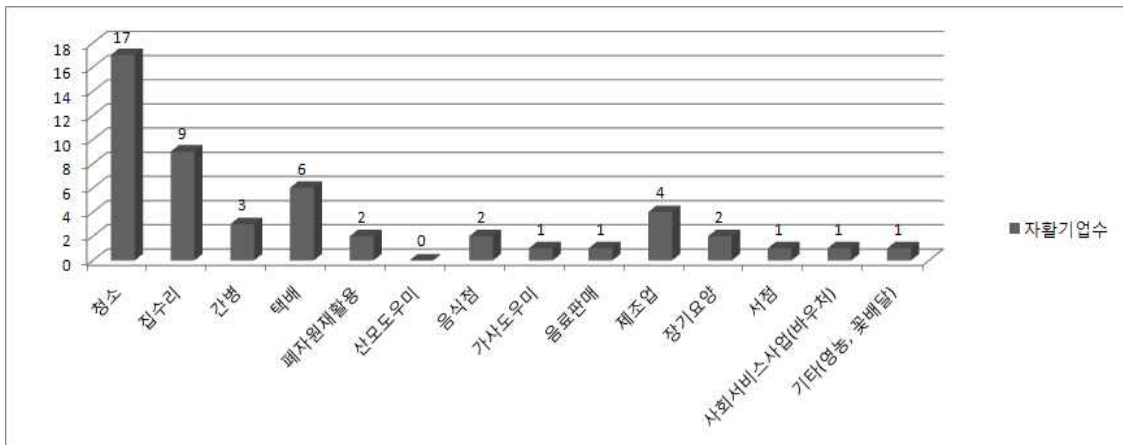
<그림 7> 지역자활센터 기준 2014년 상반기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업 규모



○ 업종 기준 2014년 상반기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업의 규모

- 청소 17개 기업, 집수리 9개 기업, 폐자원활용 6개 기업, 제조업 4개 기업 등임(<그림 8>).

<그림 8> 업종 기준 2014년 상반기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업 규모



□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자활기업의 폐업 및 합병 결과

○ 자활기업의 폐업 및 합병 결과

- 2001년 이후 설립된 77개 자활기업 중에 합병이나 명칭변경 없이 현재까지 유지된 자활기업은 47개 기업임.
- 같은 기간 동안 합병이 이루어진 자활기업은 총 6개 기업이며, 이 중 2개 자활기업은 합병 후 유지되었으며, 나머지 4개 기업은 합병 후 폐업하였음.
- 또한, 기존 명칭을 변경한 자활기업도 1개소이며, 폐업한 자활기업(23개)과 합병 후 폐업된 기업(4개)을 합쳐 폐업한 자활기업은 모두 27개였음.



- 이에 따라, 2014년 상반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활기업의 전체 규모는 50개 기업임(<표 2>).

<표 2> 2001년~2014년 상반기 동안 자활기업의 현재 상태

기업 상태		빈도	비율
유지/존속		47	79.3%
합병	후 유지	2	5.2%
	후 소멸	4	1.7%
명칭 변경		1	1.7%
폐업		23	12.1%
전체		77	100.0%

○ 자활기업의 폐업 및 합병 사유

-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의 기간 동안 합병한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합병 사유를 확인한 결과, 응답한 4개 기업 중 1개 기업은 시장확대, 나머지 3개 기업은 새로운 생존전략을 위하여 합병하였음(<표 3>).

<표 3> 자활기업의 합병 사유

합병사유	빈도	비율
시장확대	1	25.0%
새로운 생존 전략	3	75.0%
전체	4	100.0%

-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의 기간 동안 폐업한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폐업 사유를 확인한 결과, 응답한 7개 기업 중 4개 기업은 매출부진, 1개 기업은 구성원들간 갈등 때문에 폐업하였음(<표 4>).

<표 4> 자활기업의 폐업 사유

폐업사유	빈도	비율
매출부진	4	57.1%
구성원간의 갈등	1	14.3%
기타	2	28.6%
전체	7	100.0%

○ 폐업 및 합병 후 자산처리

-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의 기간 동안 합병, 또는 폐업한 자활기업의 자산처리 방식은 합병 후 소멸한 3개 자활기업 중 2개 기업은 자산을 ‘합병

기업으로 이전'하였으며, 나머지 1개 자활기업은 무응답이었으며, 합병 후 유지된 1개 자활기업은 합병 후 자산을 '조합원에 배당'하였다고 응답하였음 (<표 5>).

<표 5> 합병 및 폐업 후 자산처리(복수응답)

자산처리 방식	빈도	비율
지자체에 반환	2	18.2%
지역자활센터에 반환	2	18.2%
조합원에 배당	2	18.2%
합병기업으로 이전	2	18.2%
기타	3	27.3%
전체	11	100.0%

- 반면에, 폐업한 7개 자활기업 중 복수응답을 포함하여 2개 자활기업이 자산을 각각 '지자체에 반환'과 '지역자활센터에 반환', 1개 자활기업은 '조합원에 배당'하였음(<표 5>).

□ 2014년 상반기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업 구분

○ 지역/광역 자활기업 구분

- 2014년 6월 30일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자활기업은 50개이며, 이 중 지역기업은 45개,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인 광역기업은 5개임(<표 6>).<sup>3)</sup>
- 자활기업들 중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인 전국기업은 모두 7개이며, 지역기업 중에서 6개, 광역기업 중에서 1개가 전국기업임.

<표 6> 2014년 상반기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업 구분\*

기업구분		기업 수	비율
지역/광역 기업	지역기업	45	90.0%
	광역기업	5	10.0%
사회적 인증	사회적 인증	19	38.0%
	사회적 비인증	31	62.0%
전체		50	100.0%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활기업 1개소는 분석과정에서 지역기업이며, 사회적 인증을 받지 않은 자활기업으로 확인함.

3) 5개 광역자활기업 중 1개 기업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지만,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임.

○ 사회적 인증/비인증 자활기업 구분

-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 인증을 받은 자활 기업은 19개이며, 사회적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은 31개임(<표 6>).
- 5개 광역기업 중 사회적 인증을 받은 경우는 예비 사회적 기업 1개소, 사회적 기업 1개소 및 협동조합 1개소 등 총 3개 광역기업임.
- 나머지 16개 사회적 인증을 받은 자활기업은 지역기업임.

## 2. 2014년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업의 일반 현황

### □ 자활기업의 설립 사유

#### ○ 자활기업의 설립

- 2014년 상반기 현재 운영 중인 50개 자활기업의 설립 사유를 분석하면, 74.0%인 37개 자활기업은 참여자의 자활·자립을 위해서, 8.0%인 4개 자활기업은 자활사업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설립한 것으로 나타남(<표 7>).

<표 7> 자활기업의 설립 사유

자활기업 설립 사유	빈도	비율
사업의 시장성	3	6.0%
참여자의 자활자립	37	74.0%
자활사업단 전환시기 도래	4	8.0%
자활사업 성과 극대화(=평가)	4	8.0%
무응답	1	2.0%
미제출	1	2.0%
전체	50	100.0%

- 반면에, 4개 자활기업은 자활사업단의 전환시기 도래와 같은 소극적 이유를 자활기업의 설립 사유로 제시하였음.

<표 8> 업종 별 기업의 설립사유\*

업종	사업의 시장성	참여자의 자활자립	자활사업단 전환시기 도래	자활사업 성과 극대화	전체
청소	-	14	2	1	17
집수리	-	6	1	2	9
간병	1	1	-	-	2
택배	1	6	-	-	7
폐자원재활용	-	2	-	-	2
음식점	-	1	-	-	1
음료판매	-	1	-	-	1
제조업	-	2	1	1	4
장기요양	-	2	-	-	2
서점	-	1	-	-	1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	-	1	-	-	1
기타(영농)	1	-	-	-	1
전체	3	37	4	4	48

\*무응답 1개소, 자료 미제출 1개소

○ 업종 기준 자활기업의 설립

- 모든 업종에서 '참여자의 자활·자립'이 가장 많았으며, '간병', '택배', '기타(영농)' 업종의 각 1개 기업이 '사업의 시장성'을 이유로 자활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남(<표 8>).
- '청소', '제조업'의 경우 각각 1개 자활기업, '집수리'의 경우는 2개 자활기업이 '자활사업 성과 극대화'를 이유로 자활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대답하였음.

□ 자활기업의 법적 조직 형태

○ 자활기업의 법적 조직 형태

- 50개 자활기업의 법적 조직형태는 주식회사가 18개소, 개인사업자가 17개소이며, 협동조합은 5개소임(<표 9>).

<표 9> 자활기업의 법적 조직 형태

조직형태	빈도	비율
개인사업자	17	34.0%
공동사업자	6	12.0%
주식회사	18	36.0%
협동조합	5	10.0%
기타(주식회사 공동사업자)	1	2.0%
없음	1	2.0%
무응답	1	2.0%
미제출	1	2.0%
전체	50	100.0%

- 전체적으로 인천광역시 자활기업의 법적 형태 중 주식회사와 개인사업자가 각각 1/3씩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업구분 기준 자활기업의 법적 조직 형태

- 지역기업과 광역기업은 전체 자활기업의 경우와 같이 개인사업자(40.0%) 및 주식회사(40.0%) 형태로 등록된 경우가 대다수임(<표 10>).
- 사회적 인증을 받은 자활기업은 주식회사 형태가 절대 다수(73.7%)인 반면에, 사회적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58.6%로 절대 다수임(<표 10>).

<표 10> 기업구분 별 자활기업의 법적 조직형태\*

	지역/광역 기업		사회적 인증 여부		전체
	지역기업	광역기업	사회적 인증	사회적 비인증	
개인사업자	15	2	-	17	17
공동사업자	6	-	1	5	6
유한회사	-	-	-	-	-
주식회사	16	2	14	4	18
협동조합	4	1	3	2	5
기타	1	-	1	-	1
없음	1	-	-	1	1
전체	43	5	19	29	48

\*자료 미제출 자활기업 1개와 무응답 자활기업 1개는 지역기업과 사회적 비인증 기업에 해당됨.

○ 업종구분 기준 자활기업의 법적 조직 형태

- ‘청소’는 17개 기업 중 11개 기업이 주식회사 형태이며, ‘집수리’는 9개소 중 개인사업자가 3개 기업, 공동사업자와 협동조합이 2개 기업임(<표 11>).
- 반면에, ‘택배’는 7개 기업 중 6개 기업, ‘폐자원재활용’ 2개 기업 모두 개인 사업자임.

<표 11> 업종 별 자활기업의 법적 조직형태\*

업종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주식회사	협동조합	기타	없음	전체
청소	4	1	11	1	0	0	17
집수리	3	2	1	2	1	0	9
간병	0	0	1	0	0	1	2
택배	6	1	0	0	0	0	7
폐자원재활용	2	0	0	0	0	0	2
음식점	0	1	0	0	0	0	1
음료판매	0	0	0	1	0	0	1
제조업	0	0	0	1	0	0	1
장기요양	1	1	2	0	0	0	4
서점	0	0	2	0	0	0	2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	0	0	1	0	0	0	1
기타(영농)	1	0	0	0	0	0	1
전체	17	6	18	5	1	1	48

\*자료 미제출 자활기업 1개소, 무응답 자활기업 1개소

○ 법적 조직 형태의 이유

- 자활기업들이 현재와 같은 조직형태를 갖게 된 이유 중 15개 기업은 ‘인증조건 충족’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참여자의 책임성’이 11개 기업, ‘지침 준수’와 ‘설립의 편의성’ 및 ‘운영의 편의성’이 각각 7개 기업임(<표 12>).

- ‘운영의 편의성’을 조직형태의 이유로 제시한 7개 자활기업의 업종은 ‘청소’ 3개 기업, ‘간병’, ‘택배’, ‘제조업’, 기타(영농)가 각각 1개 기업임.
- ‘참여자의 책임성’을 조직형태의 이유로 제시한 11개 자활기업의 업종은 ‘택배’ 4개 기업, ‘집수리’와 ‘청소’가 각 2개 기업이었으며, ‘폐자원재활용’, ‘음료판매’, ‘장기요양’이 각각 1개 기업임.

<표 12> 조직형태의 이유

조직형태 이유	빈도	비율
지침에 따름	7	14.0%
설립의 편의성	7	14.0%
인증조건 충족	15	30.0%
운영의 편의성	7	14.0%
참여자의 책임성	11	22.0%
무응답	2	4.0%
미제출	1	2.0%
전체	50	100.0%

○ 법적 조직 형태 기준 조직형태의 이유

- 개인사업자 형태의 자활기업과 협동조합은 ‘참여자의 책임성’을, 주식회사 형태의 자활기업은 ‘인증조건 충족’을 조직형태의 이유로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표 13>).

<표 13> 법적 조직형태 별 조직형태의 이유\*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주식회사	협동조합	기타	없음	전체
지침에 따름	3	3	0	0	0	1	7
설립의 편의성	3	0	3	1	0	0	7
인증조건 충족	1	2	10	1	1	0	15
운영의 편의성	4	0	3	0	0	0	7
참여자의 책임성	6	1	2	2	0	0	11
전체	17	6	18	4	1	1	47

\*자료 미제출 자활기업 1개소, 무응답 자활기업 1개소

□ 자활기업의 사회적 인증 현황

○ 자활기업의 사회적 인증 현황

- 50개 자활기업 중 사회적 인증을 받은 기업은 모두 19개 기업임.
- 이 중 ‘사회적기업’이 10개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이 6개 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3개 기업임(<표 14>).

<표 14> 자활기업의 사회적 인증 현황

사회적 인증	빈도	비율
예비 사회적기업	6	12.0%
사회적기업	10	20.0%
(사회적) 협동조합	3	6.0%
협동조합		
없음	21	42.0%
무응답	9	18.0%
미제출	1	2.0%
전체	50	100.0%

○ 인천의 사회적 인증을 받은 자활기업의 비중

- 인천광역시 자활기업의 사회적 인증 현황을 전국과 비교할 경우 사회적 기업에서 인천의 12.7%, 전국의 0.7%가 인천의 자활기업임(<표 15>).
-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인천의 14.1%, 전국의 0.8%가 인천의 자활기업이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인천의 10.9%, 전국의 0.6%가 인천의 자활기업임.
- 반면에,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인천의 2.3%, 전국의 0.08%가 인천의 자활기업임.
- 변화하는 자활환경, 즉 사회적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대외적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천의 자활기업은 사회적 인증을 받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지금보다는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15> 2014년 상반기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현황

구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인천	126개소	43개소	132개소
	- 예비 71개소 - 인증 55개소		- 일반 100개소 - 생활 32개소
전국	2,340개소	780개소	일반 3,816개소
	- 예비 1,328개소 - 인증 1,012개소		

○ 업종 기준 사회적 인증을 받은 자활기업

- 전체적으로 공공시장 진입이 필요한 청소업종이 사회적 인증을 가장 많이 받았음(<표 16>).
- 청소 업종 17개 자활기업 중 (예비) 사회적기업은 2개 기업, 사회적기업은 6개 기업, 협동조합이 1개 기업임.
- 9개 자활기업이 운영 중인 집수리의 경우 (예비) 사회적 기업이 2개 기업, 협



동조합이 1개 기업임.

- 반면에, 6개 기업이 운영 중인 택배의 경우 사회적인증이 전혀 없음.
- 1개 기업이 운영 중인 커피음료판매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임.

<표 16> 업종 별 사회적 인증 현황\*

업종구분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없음	전체
청소	2	6	1	6	15
집수리	2	-	1	5	8
간병	-	1	-	-	1
택배	-	-	-	5	5
폐자원재활용	-	-	-	2	2
산모도우미	-	-	-	-	-
음식점	-	-	-	-	-
가사도우미	-	-	-	1	1
음료판매	-	-	1	-	1
제조업	2	1	-	1	4
장기요양	-	1	-	-	1
서점	-	1	-	-	1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	-	-	-	-	-
기타(영농)	-	-	-	1	1
전체	6	10	3	21	40

\*무응답 9개 자활기업, 자료 미제출 1개 자활기업

○ 업종 기준 사회적 인증을 받은 자활기업의 사유

- 자활기업이 사회적 인증을 받는 이유는 66.7%(12개 기업)가 '(공공시장에서) 사업수행의 유리함'을 제시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수요확대가 자활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청소가 대표적임(<표 17>).
- 이 외에도 '집수리', '간병', '제조업', '서점' 등에서도 공공부문 진출을 위해서 사회적 인증을 받았음.

<표 17> 업종 별 사회적 인증 이유\*

업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공공시장에서) 사업수행의 유리함	지역특성 반영	참여자의 책임성 강화	기타	전체
청소	0	6	1	1	0	8
집수리	1	2	0	0	0	3
간병	0	1	0	0	1	2
음료판매	0	0	1	0	0	1
제조업	1	2	0	0	0	3
서점	0	1	0	0	0	1
전체	2	12	2	1	1	18

\*무응답 1개 자활기업

□ 자활기업의 사무실 임대 현황

○ 자활기업의 사무실 임대 현황

- 자활기업의 사무실과 작업실 임대현황은 월세가 30개 기업으로 60.0%, 전세가 10개 기업으로 20.0%로, 전·월세 임대가 전체 자활기업의 80.0%임(<표 18>).

<표 18> 자활기업의 사무실과 작업실 임대 현황

임대현황	빈도	비율
자가	1	2.0%
지역자활센터의 무상임대	1	2.0%
지자체의 무상임대	2	4.0%
전세 유상임대	10	20.0%
월세 유상임대	30	60.0%
사무실 및 작업실 없음	2	4.0%
무응답	3	6.0%
미제출	1	2.0%
전체	50	100.0%

### 3. 자활기업의 인적 구성 및 매출현황(2009/2010~2013/2014년)

#### □ 자활기업의 인적 구성

##### ○ 자활기업의 인적 구성

- 2009년 자활기업 참여자 234명 중 30.8%인 72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으며, 차상위계층은 23.5%, 일반인은 42.7%인 100명, 기타 인원이 3.0%인 7명이었음.
- 그러나, 2014년 전체 참여자는 598명으로 증가하였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각각 28명, 18명 증가한 것에 그친 반면, 일반인은 288명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자활기업 참여자를 구성하는 비율도 2014년에는 일반인이 전체 참여자의 약 65%를 차지하였으며, 수급자는 16.7%, 차상위계층은 12.2%로 2009년에 비해 자활기업에 참여한 일반 계층의 비율이 높게 증가하였음(<표 19>).

<표 19> 자활기업 참여자의 구성\*

연도	기업수**	전체 참여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타 프로그램 지원 인원
2009년	29	234	72	55	100	7
	38	100.0%	30.8%	23.5%	42.7%	3.0%
2010년	33	326	81	52	184	9
	42	100.0%	24.8%	16.0%	56.4%	2.8%
2011년	42	435	108	49	223	55
	50	100.0%	24.8%	11.39%	51.3%	12.6%
2012년	47	538	121	61	302	54
	54	100.0%	22.5%	11.3%	56.1%	10.0%
2013년	54	585	115	88	338	44
	52	100.0%	19.7%	15.0%	57.8%	7.5%
2014년	46	598	100	73	388	37
	50	100.0%	16.7%	12.2%	64.9%	6.2%

\*2013년에 실제 존재하는 자활기업보다 조사대상 자활기업이 많은 이유는 2013년에 폐업한 5개소의 응답과 실제 존재하는 일부 다른 자활기업의 무응답에서 비롯되었음.

\*\*해당 연도 말에 존재하는 자활기업 수 및 조사대상 자활기업

- 자활기업 구성원에서 일반인의 비율 증가는 고용에 대한 욕구가 소득계층을 가리지 않거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서 배제된 저소득층이 두텁게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자활사업이 일반인을 배제하거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크게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지역/광역기업 구분 기준 자활기업의 인적 구성

- 전체적으로 지역기업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광역기업에 일반인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음(<표 20>).
- 지역기업의 경우 참여자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일반인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차상위계층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그 결과, 2009년 지역기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5.9%, 차상위계층은 19.8%, 일반인은 40.6%였으나, 2014년 6월 현재 그 비율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8.6%, 차상위계층 12.3%, 일반인 64.4%임.
- 반면에, 광역기업의 경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은 항상 10% 미만이고, 차상위계층의 비율이 약 40%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일반인의 비율은 50% 이상임.
- 그 결과, 2009년 광역기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1%, 차상위계층은 40.5%, 일반인은 52.4%였으나, 2014년 6월 현재 그 비율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7%, 차상위계층 11.5%, 일반인 67.3%임.

<표 20> 지역/광역 자활기업 구분 기준 자활기업의 참여자 구성

연도	구분	기업수	전체 참여자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일반	타 프로그램 지원 인원
2009년	지역기업	26	192 100.0%	69 35.9%	38 19.8%	78 40.6%	7 3.6%
	광역기업	3	42 100.0%	3 7.1%	17 40.5%	22 52.4%	- -
2010년	지역기업	30	262 100.0%	80 30.5%	36 13.7%	137 52.3%	9 3.4%
	광역기업	3	64 100.0%	1 1.6%	16 25.0%	47 73.4%	- -
2011년	지역기업	39	336 100.0%	107 31.8%	36 10.7%	148 44.0%	45 13.4%
	광역기업	3	99 100.0%	1 1.0%	13 13.1%	75 75.8%	10 10.1%
2012년	지역기업	43	417 100.0%	117 28.1%	47 11.3%	209 50.1%	44 10.6%
	광역기업	4	121 100.0%	4 3.3%	14 11.6%	93 76.9%	10 8.3%
2013년	지역기업	50	486 100.0%	109 22.4%	77 15.8%	270 55.6%	30 6.2%
	광역기업	4	99 100.0%	6 6.1%	11 11.1%	68 68.7%	14 14.1%
2014년	지역기업	42	494 100.0%	92 18.6%	61 12.3%	318 64.4%	23 4.7%
	광역기업	4	104 100.0%	8 7.7%	12 11.5%	70 67.3%	14 13.5%

○ 사회적 인증 기준 자활기업의 인적 구성

- 전체적으로 사회적 인증을 받지 않은 자활기업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사회적 인증을 받은 자활기업에는 일반인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음(<표 21>).
- 사회적 인증을 받지 않은 자활기업의 경우 참여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일반인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점차 수급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일반인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차상위계층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그 결과, 2009년 사회적 인증을 받지 않은 자활기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6.7%, 차상위계층은 20.8%, 일반인은 37.5%였으나, 2014년 6월 현재 그 비율은 수급자 30.2%, 차상위계층 14.4%, 일반인 46.8%임.

<표 21> 사회적 인증 기준 자활기업의 참여자 구성

연도	기업구분	기업수	전체 참여자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일반	타 프로그램 지원 인원
2009년	사회적 인증	9	114 100.0%	28 24.6%	30 26.3%	55 48.2%	1 0.9%
	사회적 비인증	20	120 100.0%	44 36.7%	25 20.8%	45 37.5%	6 5.0%
2010년	사회적 인증	9	209 100.0%	28 13.4%	27 12.9%	153 73.2%	1 0.5%
	사회적 비인증	24	117 100.0%	53 45.3%	25 21.4%	31 26.5%	8 6.8%
2011년	사회적 인증	11	271 100.0%	38 14.0%	22 8.1%	176 64.9%	35 12.9%
	사회적 비인증	31	164 100.0%	70 42.7%	27 16.5%	47 28.7%	20 12.2%
2012년	사회적 인증	14	368 100.0%	53 14.4%	35 9.5%	246 66.8%	34 9.2%
	사회적 비인증	33	170 100.0%	68 40.0%	26 15.3%	56 32.9%	20 11.8%
2013년	사회적 인증	18	406 100.0%	50 12.3%	56 13.8%	268 66.0%	32 7.9%
	사회적 비인증	36	179 100.0%	65 36.3%	32 17.9%	70 39.1%	12 6.7%
2014년	사회적 인증	18	459 100.0%	58 12.6%	53 11.5%	323 70.4%	25 5.4%
	사회적 비인증	28	139 100.0%	42 30.2%	20 14.4%	65 46.8%	12 8.6%

- 반면에, 사회적 인증 기업의 경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비율은 유사한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일반인의 비율은 약 5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그 결과, 2009년 사회적 인증 자활기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4.6%, 차상위계층은 26.3%, 일반인은 48.2%였으나, 2014년 6월 현재 그 비율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6%, 차상위계층 11.5%, 일반인 70.4%임.

○ 업종 및 소득계층 기준 자활기업의 인적 구성

- 업종을 기준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구성도 차별적임.
- 청소, 간병, 장기요양 등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업종의 경우 자활기업 참여자 중 일반인의 비율이 대단히 높음(<표 22>).
- 즉, 자활기업 참여자 중 청소의 경우 62.7%, 간병은 83.5%, 장기요양은 84.1%가 일반인임.

<표 22> 업종 및 소득계층 별 참여자 구성 (2014년)

업종	기업수	전체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타 프로그램 지원인원
청소 I	14	268	40	39	168	21
청소 II*	(13)	(166)	(38)	(38)	(87)	(3)
집수리	10	48	27	3	16	2
간병	2	79	3	10	66	-
택배	6	15	8	2	5	-
폐자원재활용	2	5	1	-	4	-
산모도우미	-	-	-	-	-	-
음식점	1	2	1	-	1	-
가사도우미	-	-	-	-	-	-
음료판매	1	4	2	1	1	-
제조업	4	23	7	2	10	4
장기요양	2	132	10	11	111	-
서점	1	1	1	-	-	-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	2	9	-	5	4	-
기타(영농, 꽃배달)	1	12	-	-	2	10
전체 I	46	598	100	73	388	37
전체 II*	(45)	(496)	(98)	(72)	(307)	(19)

\*2014년 6월 현재 청소업체 17개소 중 자료를 제출한 14개 기업 중 청소업종 전체의 인원 중 38.1%, 매출액 25.1%인 청소 자활기업 1개소를 제외한 현황.

- 반면에, 집수리의 경우 자활기업 참여자의 56.3%, 택배의 경우 53.3%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임.
- 이에 따라, 자활사업 고유의 목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일자리지원을 위해서는 집수리와 택배 등의 업종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며, 이들 업종이 사회적 인정을 받고, (공공)시장에서의 생존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표 23> 성별 기준 자활기업 참여자 구성

연도	기업수	전체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타 프로그램 지원인력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9년	29	234	39	195	72	23	49	55	2	53	100	11	89	7	3	4
	38	100.0	16.7	83.3	100.0	31.9	68.1	100.0	3.6	96.4	100.0	11.0	89.0	100.0	42.9	57.1
2010년	33	326	71	255	81	28	53	52	5	47	184	34	150	9	4	5
	42	100.0	21.8	78.2	100.0	34.6	65.4	100.0	9.6	90.4	100.0	18.5	81.5	100.0	44.4	55.6
2011년	42	435	96	339	108	34	74	49	6	43	223	32	191	55	24	31
	50	100.0	22.1	77.9	100.0	31.5	68.5	100.0	12.2	87.8	100.0	14.3	85.7	100.0	43.6	56.4
2012년	47	538	115	423	121	40	81	61	9	52	302	40	262	54	25	29
	54	100.0	21.4	78.6	100.0	33.1	66.9	100.0	14.8	85.2	100.0	13.2	86.8	100.0	46.3	53.7
2013년	54	585	133	452	115	42	73	88	21	67	338	50	288	44	19	25
	52	100.0	22.7	77.3	100.0	36.5	63.5	100.0	23.9	76.1	100.0	14.8	85.2	100.0	43.2	56.8
2014년	46	598	139	459	100	42	58	73	14	59	388	68	320	37	19	18
	50	100.0	23.2	76.8	100.0	42.0	58.0	100.0	19.2	80.8	100.0	17.5	82.5	100.0	51.4	48.6

○ 자활기업의 남녀 구성

- 성별을 기준으로 자활기업 참여자 구성을 분석하면, 2009년의 경우 전체 234명 중 남성이 39명으로 16.7%, 여성이 195명으로 83.3%를 차지함으로써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 이러한 성별 구성은 2014년에도 남성 23.2%, 여성 76.8%으로 성비 불균형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여성의 비중이 크게 높음(<표 23>).



<표 24> 업종 별 자활기업 참여자의 남녀 구성

업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기업 수	소계	남	여	기업 수	소계	남	여	기업 수	소계	남	여	기업 수	소계	남	여	기업 수	소계	남	여	기업 수	소계	남	여
청소	8	38	14	24	8	115	36	79	12	140	39	101	13	176	46	130	16	241	60	181	14	268	67	201
집수리	7	25	11	14	7	29	15	14	7	32	14	18	9	45	22	23	12	52	27	25	10	48	28	20
간병	2	41	-	41	2	65	-	65	2	90	-	90	2	111	-	111	2	81	-	81	2	79	-	79
택배	2	7	4	3	4	14	9	5	7	22	14	8	7	25	16	9	6	18	12	6	6	15	12	3
폐자원재활용	1	3	-	1	1	3	2	1	2	10	7	3	2	6	5	1	3	8	6	2	2	5	3	2
산모도우미	1	8	-	8	1	8	-	8	1	8	-	8	1	5	-	5	-	-	-	-	-	-	-	-
음식점	-	-	-	-	-	-	-	-	1	4	-	4	2	6	1	5	2	5	1	4	1	2	-	2
음료판매	-	-	-	-	-	-	-	-	-	-	-	-	-	-	-	-	1	4	-	4	1	4	-	4
제조업	3	11	4	7	3	12	4	8	3	13	6	7	4	18	8	10	5	24	14	10	4	23	16	7
장기요양	2	87	2	85	2	52	2	50	2	74	2	72	2	109	2	107	2	126	2	124	2	132	2	130
서점	1	3	1	2	1	3	1	2	1	8	3	5	1	8	4	4	1	1	-	1	1	1	-	1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	1	9	-	9	2	19	-	19	2	18	-	18	2	15	-	15	2	11	-	11	2	9	-	9
기타(영농)	1	2	1	1	2	6	2	4	2	16	11	5	2	14	11	3	2	14	11	3	1	12	11	1
전체	29	234	39	195	33	326	71	255	42	435	96	339	47	538	115	423	54	585	133	452	46	598	139	459

○ 업종 기준 자활기업의 남녀 구성

- 자활기업에 참여한 인원은 2009년 234명에서 2014년 598명으로 크게 증가 하였으며, 특히 증가인원의 대부분이 청소와 간병, 장기요양 업종에서 발생 하였음(<표 24>).
- 자활기업 참여 인원의 청소와 장기요양 업종 집중 현상은 성비 불균형을 심 화시킨 원인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청소(가사)와 간병(돌봄), 장기요양(돌봄) 은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역할로 여겨졌기 때문임.
- 2014년 자활기업 참여자 전체 598명 중 청소, 간병, 장기요양에 참여한 사람 은 479명으로 80.1%였으며, 이들 중 85.6%인 410명이 여성 참여자임.
- 간병 업종은 참여자 79명 전원이, 장기요양 업종은 참여자 132명 중에 130 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돌봄과 관련된 업종에서 여성 집중현상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청소와 돌봄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경우 여성 고용의 상당부 분을 흡수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자활기업의 창업 자금

○ 자활기업의 창업 자금

- 2014년 상반기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업의 창업자금 평균액은 약 7,451만원이지만, 업종에 따른 크게 차이가 있음(<표 25>).
- ‘간병’의 경우 창업자금은 평균 약 1억 6,24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음식점’과 ‘폐자원활용’ 및 ‘청소’가 각각 평균 약 1억 2,330만원, 1억 2,289원, 1억 763만원으로 1억원 이상이었음.
- 반면에, ‘서점’과 ‘가사도우미’는 각각 500만원, 400만원으로 가장 적었음.

<표 25> 업종 별 자활기업의 평균 창업자금\*

(단위: 천 원)

업종	기업수	총액	참여자 출자금	지역자활센터 창업지원금	외부 창업지원금
청소	16	107,632	3,781	97,288	9,063
집수리	8	30,310	588	26,597	9,375
간병	2	162,499	4,875	157,624	-
택배	7	47,545	750	46,795	-
폐자원재활용	2	122,895	1,500	45,000	-
음식점	1	123,301	1,000	122,301	-
가사도우미	1	4,000	-	4,000	-
음료판매	1	39,500	-	39,500	-
제조업	4	40,483	-	40,483	-
장기요양	2	52,050	2,050	-	50,000
서점	1	5,000	-	5,000	-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	-	-	-	-	-
기타(영농)	1	121,500	-	-	121,500
전체	46	74,511	1,920	61,629	9,598

\*2014년 상반기 현재 운영 중인 자활기업 50개소 중 무응답 3개 기업, 자료 미제출 1개 기업

- 전체적으로 창업자금의 평균 80%이상의 절대 금액이 지역자활센터의 지원금이며, 참여자의 출자금은 평균 5%이하의 금액에 불과함.
- 다만, 참여자가 많은 업종인 청소나 간병의 경우 참여자의 출자금도 평균이 상으로 많음.

□ 자활기업의 수지 현황

○ 자활기업의 수지 현황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광역시 자활기업의 매출액 및 인건비와 사업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표 26>).

- 이는 자활기업의 수가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자활기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음.

<표 26> 인천광역시 자활기업의 수지현황

(단위: 천 원)

연도	기업수	구분	매출액	인건비	사업비
2009년	21개	총액	2,799,522	1,797,671	957,052
		평균	133,311	85,603	45,574
2010년	30개	총액	5,374,350	3,378,468	1,850,266
		평균	179,145	112,616	61,676
2011년	39개	총액	6,483,445	4,265,152	2,376,101
		평균	166,242	109,363	60,926
2012년	44개	총액	8,719,876	5,670,715	3,739,285
		평균	198,179	128,880	84,984
2013년	56개	총액	12,442,234	6,905,928	6,198,125
		평균	222,183	123,320	110,681

<표 27> 지역/광역기업 구분 기준 자활기업의 수지현황

(단위: 천 원)

연도	기업구분	기업수	구분	매출액	인건비	사업비
2009년	지역기업	13	총액	1,839,102	1,087,107	681,461
			평균	141,469	83,624	52,420
	광역기업	1	총액	385,260	401,389	50,613
			평균	385,260	401,389	50,613
2010년	지역기업	21	총액	3,702,327	2,273,734	1,321,589
			평균	176,301	108,273	62,933
	광역기업	1	총액	659,264	673,792	6,948
			평균	659,264	673,792	6,948
2011년	지역기업	28	총액	4,825,846	3,200,496	1,748,545
			평균	172,352	114,303	62,448
	광역기업	2	총액	683,299	600,279	65,786
			평균	341,650	300,140	32,893
2012년	지역기업	31	총액	6,572,537	4,229,635	2,714,821
			평균	212,017	136,440	87,575
	광역기업	3	총액	1,119,790	972,171	419,209
			평균	373,263	324,057	139,736
2013년	지역기업	42	총액	10,584,120	5,886,866	5,256,889
			평균	252,003	140,163	125,164
	광역기업	4	총액	1,265,796	732,105	627,817
			평균	316,449	183,026	156,954

○ 지역/광역기업 구분 기준 자활기업의 수지 현황

- 지역기업과 비교할 경우 광역기업의 평균 인건비와 매출액이 많다고 할 수 있음(<표 27>).
- 2009년의 경우 지역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약 1.4억원, 인건비는 약 8,400만원인 반면에, 광역기업의 경우 각각 3.9억원과 4.0억원이었음.
- 또한, 2013년 지역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약 2.5억원, 인건비는 약 1.4억원인 반면에, 광역기업의 경우 각각 3.7억원과 1.8억원이었음.
- 이에 따라, 지역기업보다 광역기업 1개소의 평균 인력규모와 매출액이 많다고 할 수 있음.

<표 28> 사회적 인증 기준 자활기업의 수지현황

(단위: 천 원)

연도	기업구분	기업수	구분	매출액	인건비	사업비
2009년	사회적 인증	5	총액 평균	1,307,430 261,486	1,128,486 225,697	281,382 56,276
	사회적 비인증	9	총액 평균	916,932 101,881	360,010 40,001	450,692 50,077
2010년	사회적 인증	9	총액 평균	2,640,024 293,336	2,232,596 248,066	525,385 58,376
	사회적 비인증	13	총액 평균	1,721,567 132,428	714,930 54,995	803,152 61,781
2011년	사회적 인증	11	총액 평균	3,391,943 308,358	2,807,397 255,218	877,309 79,755
	사회적 비인증	19	총액 평균	2,117,202 111,432	993,378 52,283	937,022 49,317
2012년	사회적 인증	13	총액 평균	4,608,950 354,535	3,755,977 288,921	1,645,692 126,592
	사회적 비인증	21	총액 평균	3,083,377 146,827	1,445,829 68,849	1,488,338 70,873
2013년	사회적 인증	19	총액 평균	6,798,875 357,836	4,724,988 248,684	2,732,575 143,820
	사회적 비인증	27	총액 평균	5,051,041 187,076	1,893,983 70,148	3,152,131 116,746

○ 사회적 인증 기준 자활기업의 수지 현황

- 사회적 인증을 받은 자활기업의 평균 인건비와 매출액이 사회적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의 경우보다 많음(<표 28>).
- 2009년의 경우 사회적 인증을 받지 않은 자활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약 1.0억원, 인건비는 약 4,000만원인 반면에, 사회적 인증 자활기업의 경우 각각 2.6억원과 2.3억원이었음.

- 2013년 사회적 인증을 받지 않은 자활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약 1.9억원, 인건비는 약 7,000만원인 반면에, 사회적 인증 자활기업의 경우 각각 3.6억원과 2.5억원이었음.
- 이와 같은 차이는 사회적 인증을 받은 자활기업이 그렇지 않은 자활기업보다 고용한 인력이 많고, 공공시장에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아서 매출액이 많은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음.

<표 29> 업종 기준 자활기업의 연도별 평균 매출액

(단위: 천 원)

업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청소 I*	3개	93,420	7개	200,282	12개	180,892	12개	212,332	17개
청소 II*	2개	60,474	6개	104,147	11개	124,739	11개	165,974	16개	177,011
집수리	4개	95,787	4개	172,038	4개	149,524	5개	187,422	9개	217,283
간병	1개	385,260	2개	348,822	2개	359,092	2개	446,829	2개	366,262
택배	1개	0	3개	92,774	4개	130,541	6개	122,345	6개	148,915
폐자원재활용	-	-	-	-	1개	49,975	1개	332,169	2개	729,016
산모도우미	-	-	-	-	-	-	-	-	-	-
음식점	-	-	-	-	-	-	-	-	-	-
음료판매	-	-	-	-	-	-	-	-	1개	122,157
제조업	2개	49,040	2개	83,239	2개	145,403	3개	223,403	4개	248,787
장기요양	2개	514,670	2개	517,240	2개	408,169	2개	529,399	2개	832,524
서점	1개	48,278	1개	24,513	1개	102,065	1개	278,927	1개	60,497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	-	-	1개	70,030	1개	165,784	1개	166,337	1개	144,611
기타(영농)	-	-	-	-	1개	75,036	1개	73,067	1개	41,820
전체 I*	14개	158,883	22개	198,254	30개	183,638	34개	226,245	46개	257,607
전체 II**	13개	158,850	21개	170,690	29개	162,434	33개	211,214	45개	242,245

\*2014년 6월 현재 청소업체 17개소 중 자료를 제출한 14개 기업 중 청소업종 전체의 인원 중 38.1%, 매출액 25.1%인 청소 자활기업 1개소를 제외한 현황.

### ○ 업종 기준 자활기업의 수지 현황

- 자활기업의 2013년 평균 매출액을 업종별로 분석하면, ‘장기요양’이 평균 8억 3,252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자원재활용’도 약 7억 2,901만원으로 상당히 많았음(<표 29>).
- ‘기타(영농)’과 ‘서점’의 평균 매출액은 각각 약 4,182만원, 약 6,049만원으로 전체 업종 중에 가장 적었음.

### □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 ○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 자활기업에 대한 전체 지원금은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

다가, 2013년부터 지원금액이 감소하였음(<표 30>).

- 자활기업에 대한 평균 지원액은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으나, 2010년과 비교하여 2014년에는 크게 감소하였음.
- 지원 현황을 항목별로 분석하면, 인건비 지원은 2010년 전체 지원금액의 38.3%에서 2011년 57.7%, 2013년 70.1%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14년 51.3%로 크게 감소하였음.
- 이와는 달리, 물품지원비는 2010년 52.7%에서 2012년 10.9%까지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 다시 38.1%로 크게 반등하였음.
- 사업비는 전체 지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10년 9.0%에서 2012년에 28.4%로 증가하였지만, 2014년에는 10.6%로 감소하였음.
- 업종의 경우 '청소', '집수리', '제조업', '장기요양', '서점' 등이 지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30> 자활기업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단위: 천 원)

연도	구분	지원분야			전체
		인건비	사업비	물품지원	
2010년	건수	10	4	2	16
	총액	80,602	19,047	111,000	210,649
	비율	38.3%	9.0%	52.7%	100.0%
	평균	15,806	4,625	130,000	34,172
2011년	건수	14	9	3	26
	총액	274,303	79,316	121,800	475,419
	비율	57.7%	16.7%	25.6%	100.0%
	평균	19,593	8,813	40,600	18,285
2012년	건수	25	14	3	42
	총액	750,396	351,560	135,000	1,236,956
	비율	60.7%	28.4%	10.9%	100.0%
	평균	30,016	25,111	45,000	29,451
2013년	건수	23	12	1	36
	총액	624,330	136,215	130,000	890,545
	비율	70.1%	15.3%	14.6%	100.0%
	평균	27,145	11,351	130,000	24,737
2014년	건수	18	6	2	26
	총액	185,471	38,192	137,600	361,263
	비율	51.3%	10.6%	38.1%	100.0%
	평균	10,304	6,365	68,800	13,895

<표 31> 자활기업 지원 사유

연도	한시적 인건비	광역/중앙 자활센터 지원	(예비) 사회적기업	민간의 사회공헌	기타	전체
2010년	9 (56.2%)	4 (25.0%)	2 (12.5%)	- -	1 (6.2%)	16 (100.0%)
2011년	5 (19.2%)	4 (15.4%)	16 (61.5%)	- -	1 (3.8%)	26 (100.0%)
2012년	13 (31.0%)	3 (7.1%)	23 (54.8%)	2 (4.8%)	1 (2.4%)	42 (100.0%)
2013년	8 (22.2%)	3 (8.3%)	24 (66.7%)	- -	1 (2.8%)	36 (100.0%)
2014년	9 (34.6%)	2 (7.7%)	14 (53.8%)	- -	1 (3.8%)	26 (100.0%)

○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사유

-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사유는 2010년의 경우는 16개 기업 중 ‘한시적 인건비’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1년 이후에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표 31>).
- 이에 따라, 자활기업에 대한 외부 지원은 전통적인 ‘한시적 인건비’ 지원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사회적경제 차원에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자활기업이 생존을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격 자체를 사회적 경제로 전환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4. 자활기업의 사회적 자원 및 생존전략

- 일반/공공시장에 대한 평가 및 거래 현황
- 시장상황에 대한 자활기업의 자체 평가

<표 32> 자활기업의 시장상황에 대한 자체 평가\*

시장 구분	전체**	지역/광역 기업***		사회적 인증 여부	
		지역	광역	사회적 인증	사회적 비인증
일반시장	2.47	2.46	2.50	2.61	2.37
공공시장	2.67	2.79	1.50	2.95	2.48

\*1: 매우 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매우 좋음

\*\*무응답: 일반시장 4개, 공공시장 3개; 미제출: 일반시장 1개, 공공시장 1개.

\*\*\*지역기업: 미제출: 1개, 무응답: 3개(공공시장: 2개), 광역기업: 무응답: 1개

- 2014년 상반기에 운영 중인 자활기업 50개소가 자신들이 참여하는 시장의 상황에 대한 전망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는 일반시장 상황은 2.47, 공공시장 상황은 2.67로 모두 보통(3.0)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표 32>).
- 지역/광역 및 사회적 인증/비인증 자활기업 중 사회적 인증을 받은 기업의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가 가장 긍정적이지만, '보통(3)'에는 미달되는 평가를 하고 있음.
- 일반시장 상황에 대하여 지역기업보다는 광역기업, 사회적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는 사회적 인증 기업의 평가가 조금 긍정적이지만, 모든 경우에서 '나쁘다(2)'와 '보통(3)'의 중간 정도임.
- 공공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광역기업보다는 지역기업, 사회적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는 사회적 인증기업의 평가가 조금 긍정적임.
- 지역기업과 사회적 인증 자활기업은 '보통(3)'에는 미달되는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적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은 '나쁘다(2)'와 '보통(3)'의 중간 정도로 평가하고 있으며, 광역기업은 이보다 나쁜 수준으로 '매우 나쁘다(1)'와 '나쁘다(2)'의 중간 정도로 평가하고 있음.



<표 33> 업종 별 자활기업의 시장상황에 대한 자체 평가\*

업종구분		일반시장	공공시장
청소	기업수	17	17
	평균	2.29	2.65
집수리	기업수	9	9
	평균	2.22	2.78
간병	기업수	2	2
	평균	3.00	2.50
택배	기업수	6	6
	평균	3.17	3.00
폐자원재활용	기업수	2	2
	평균	1.50	2.00
음식점	기업수	1	1
	평균	2.00	2.00
음료판매	기업수	1	1
	평균	5.00	5.00
제조업	기업수	4	4
	평균	2.50	2.25
장기요양	기업수	1	2
	평균	3.00	4.00
서점	기업수	1	1
	평균	1.00	1.00
기타(영농)	기업수	1	1
	평균	3.00	1.00
전체	기업수	45	46
	평균	2.47	2.67

\*1: 매우 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매우 좋음

\*\*무응답: 일반시장 4개, 공공시장 3개 자활기업; 자료미제출: 일반시장 1개, 공공시장 1개 자활기업

○ 업종 기준 시장상황에 대한 자활기업의 자체 평가

- ‘택배’가 일반시장은 평균 3.17, 공공시장은 3.00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음(<표 33>).
- 반면에, ‘폐자원재활용’은 일반시장 평균 1.50, 공공시장 평균 2.00로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음.
- 또한, 업체 수가 가장 많고, 사회적 인증을 받은 업체도 가장 많으며, 고용된 인력도 많은 ‘청소’업종은 일반시장 평균 2.29, 공공시장 평균 2.65로 전체 평균과 가장 유사하여, 시장전망이 밝지만은 않음.
- 아마도, 경쟁이 많은 업종, 고용인력이 많은 업종이라서 이러한 평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4> 기업구분 자활기업의 2013년 시장매출분포

(단위: 천 원)

기업구분		지역/광역 기업		사회적 인증 여부	
		지역기업	광역기업	사회적 인증	사회적 비인증
기업수		44	5	19	30
전체	총액	12,856,734	1,287,333	7,246,068	6,897,999
	평균	298,994	321,833	381,372	246,357
일반시장	총액	4,491,604	640,235	2,534,542	2,597,297
	평균	124,767	160,059	140,808	118,059
공공시장	총액	8,372,969	647,098	4,721,526	4,298,541
	평균	270,096	161,775	314,768	214,927

\*지역기업이자 사회적 비인증 자활기업 1개소 자료 미제출.

○ 기업 구분 기준 공공/일반시장에서 자활기업의 매출액

- 2014년 상반기에 운영 중인 자활기업 50개소의 2013년 매출액은 광역기업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자활기업이 공공시장 매출액이 일반시장 매출액보다 많음(<표 34>).
- 광역기업이 공공시장 상황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은 공공시장에서의 매출액이 자활기업 중 유일하게 작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음.

<표 35> 업종 별 자활기업의 2013년 평균 매출액

(단위: 천 원)

업종	기업수	전체	기업수	일반시장	기업수	공공시장
청소	17	215,713	14	99,400	12	190,461
집수리	9	386,141	8	51,046	9	340,527
간병	2	366,007	2	192,175	1	347,664
택배	6	208,078	5	50,644	5	199,049
폐자원재활용	2	719,255	2	719,255	-	-
산모도우미	-	-	-	-	-	-
음식점	-	-	-	-	-	-
가사도우미	1	16,560	1	16,560	-	-
음료판매	1	102,511	1	102,511	-	-
제조업	4	392,919	4	266,932	3	167,983
장기요양	2	822,502	1	18,700	2	813,152
서점	1	60,497	1	8,480	1	52,017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	1	144,611	-	-	1	144,611
기타(영농, 꽃배달)	1	41,820	1	41,820	1	-
전체	47	300,938	40	128,296	35	257,716

- 업종 기준 공공/일반시장에서 자활기업의 평균 매출액
  - 자활기업의 매출을 일반/공공 시장으로 구분할 경우 ‘폐자원재활용’, ‘산모도우미’, ‘가사도우미’, ‘음식점’, ‘음료판매’, ‘기타’ 업종은 매출액 전액이 일반 시장에서 발생하였음(<표 35>).
  - 반면에, ‘청소’, ‘집수리’, ‘택배’, ‘서점’은 공공시장에서의 매출액이 일반시장 매출액보다 컸으며, 특히 ‘사회서비스사업’의 매출액은 전액, ‘장기요양’은 거의 대부분의 매출액이 공공시장에서 발생하였음.

□ 자활기업의 지역 자원

- 자활기업의 교육기관
  - 2014년 상반기에 운영 중인 자활기업이 첫 번째로 선호하는 교육기관으로 ‘지역자활협회 및 센터’를 선택한 규모는 22개 기업으로 가장 많음(<표 36>).
  -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기업진흥센터’를 선택한 경우가 8개 기업, ‘자체 교육’을 선택한 경우도 8개 기업임.

<표 36> 자활기업의 주요 교육기관 (1순위)

교육기관	전체*	지역/광역 기업**		사회적 인증 여부***	
		지역기업	광역기업	사회적 인증	사회적 비인증
중앙/광역자활센터	3	1	2	1	2
지역자활협회 및 센터	22	22	0	5	17
소상공인진흥원	-	0	0	0	0
고용노동부(직업훈련기관)	-	0	0	0	0
사회적기업진흥센터	8	7	1	7	1
대학 및 사회복지시설 위탁교육	-	0	0	0	0
지자체	-	0	0	0	0
자체교육	8	7	1	5	3
기타(한국주거복지협회)	2	2	0	0	2
전체	43	39	4	18	25

\*무응답 6개소, 자료 미제출 1개소

\*\*지역기업: 미제출 1개, 무응답 5개; 광역기업: 무응답 1개

\*\*\*사회적 인증: 무응답 1개; 사회적 인증: 미제출 1개, 무응답 5개

- 지역기업과 사회적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들은 ‘지역자활센터나 협회’를 교육기관으로 선택한 경우가 절대 다수인 반면에, 광역기업은 ‘중앙자활센터나 광역자활센터’, 사회적 인증기업은 ‘사회적기업진흥센터’를 교육기관 1순위로 선택하고 있음.
- ‘기타’로 한국주거복지협회를 교육기관으로 제시한 2개 자활기업의 업종은 ‘집수리’임.

<표 37> 자활기업의 주요 사업지원 및 자문 기관 (1순위)

사업지원 및 자문기관	전체*	지역/광역 기업**		사회적 인증 여부***	
		지역기업	광역기업	사회적 인증	사회적 비인증
중앙/광역자활센터	6	3	3	2	4
지역자활협회 및 센터	25	25	0	7	18
각 지역자활센터 모법인	1	1	0	0	1
지자체	8	8	0	5	3
사회복지시설	-	0	0	0	0
고용노동부(중간조직 포함)	-	0	0	0	0
협력업체	3	3	0	3	0
기타	2	1	1	1	1
전체	45	41	4	18	27

\*무응답: 4개, 미제출: 1개.

\*\*지역기업: 미제출 1개, 무응답 3개; 광역기업: 무응답 1개

\*\*\*사회적 인증: 무응답 1개; 사회적 비인증: 미제출 1개, 무응답 3개

○ 자활기업의 사업지원 및 자문 기관

- 2014년 상반기에 운영 중인 자활기업의 절반 이상은 ‘지역자활센터나 협회’로부터 사업지원이나 자문을 받음(<표 37>).
- 지역자활기업과 사회적 인증을 받지 않은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나 협회’에서 사업지원이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절대 다수인 반면에, 광역자활기업은 ‘중앙자활센터나 광역자활센터’, 사회적 인증기업은 ‘지역자활센터나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사업지원이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절대 다수임.

<표 38> 업종 기준 자활기업의 사업지원 및 자문 기관\* (1순위)

업종 구분	중앙/광역 자활센터	지역자활협회 및 센터	지역자활센터 모법인	지자체	협력업체	기타	전체
청소	3	8	0	4	2	0	17
집수리	0	2	1	3	0	2	8
간병	1	1	0	0	0	0	2
택배	0	6	0	0	0	0	6
폐자원재활용	0	2	0	0	0	0	2
산모도우미	0	0	0	0	0	0	0
음식점	0	1	0	0	0	0	1
가사도우미	0	0	0	0	0	0	0
음료판매	0	1	0	0	0	0	1
제조업	1	2	0	1	0	0	4
장기요양	0	1	0	0	1	0	2
서점	0	1	0	0	0	0	1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	0	0	0	0	0	0	0
기타(영농)	1	0	0	0	0	0	1
전체	6	25	1	8	3	2	45

\*무응답: 4개, 미제출: 1개.

- 업종 기준 자활기업의 사업지원 및 자문 기관
  - 2014년 상반기에 운영 중인 자활기업이 선호하는 사업지원 및 자문 기관을 업종별로 분석하면, 대부분의 업종이 '지역자활협회 및 센터'를 선호함(<표 38>).
  - 반면에, 사회적 경제에 편입되는 경향이 강한 '청소'와 '집수리' 업종의 일부 기업들은 '지자체'를 선호함.

<표 39> 자활기업의 후원기관 (1순위)

후원기관	전체*	지역/광역 기업**		사회적 인증 여부***	
		지역기업	광역기업	사회적 인증	사회적 비인증
중앙/광역자활센터	2	1	1	1	1
지역자활협회 및 센터	22	19	3	8	14
각 지역자활센터 모법인	3	3	0	0	3
지자체	4	4	0	1	3
사회복지시설	1	1	0	1	0
협력업체	7	7	0	4	3
기타	3	3	0	2	1
전체	42	38	4	17	25

\*무응답 7개소, 자료 미제출 1개소

\*\*지역기업: 미제출 1개, 무응답 6개; 광역기업: 무응답 1개

\*\*\*사회적 인증: 무응답 2개; 사회적 비인증: 미제출 1개, 무응답 5개

- 자활기업의 후원기관
  - 자활기업을 후원하는 단체는 자활기업의 구분과 관계없이 '지역자활협회 및 센터'가 22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협력업체'를 선택한 자활기업은 7개, '지자체'를 선택한 자활기업은 4개 등임(<표 39>).

#### □ 자활기업의 향후 3년에 대한 생존 전망

- 자활기업의 향후 3년에 대한 생존 전망
  - 2014년 상반기에 운영 중인 자활기업들이 향후 3년의 생존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자체 평가한 결과, 보통(3)과 나쁘다(2) 사이의 2.76으로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게 전망하고 있음(<표 40>).
  - 광역기업과 사회적 인증기업은 보통(3)이상으로 전망하는 반면에, 지역기업과 사회적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은 보통(3) 미만으로 전망하고 있음.
  - 특히, 사회적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향후 3년에 대하여 긍정적이지 않게 전망하고 있음.

<표 40> 자활기업의 향후 3년 생존에 대한 전망

구분		기업수	평균
전체		46	2.76
지역/광역기업*	지역기업	42	2.74
	광역기업	4	3.00
사회적 인증 여부**	사회적 인증	19	3.11
	비사회적 인증	27	2.52

\*무응답 3개, 미제출 1개

\*\*지역기업: 미제출 1개, 무응답 2개; 광역기업: 무응답 1개

\*\*\*비사회적 인증: 미제출 1개, 무응답 3개

○ 업종 기준 자활기업의 향후 3년에 대한 생존 전망

- 2014년 상반기에 운영되고 있는 자활기업을 업종을 기준으로 향후 3년의 생존전망을 분석할 경우, '제조업'업종이 평균 3.50으로 생존전망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표 41>).
- 반면에, '폐자원재활용'업종이 평균 1.50으로 생존전망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기업 수가 가장 많고, 사회적 경제에 잘 적응하고 있지만, 시장경쟁이 치열한 '청소'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향후 3년의 생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41> 업종 별 자활기업의 향후 3년 생존 전망\*

업종	빈도	평균
청소	17	2.59
집수리	9	2.56
간병	2	3.00
택배	6	3.17
폐자원재활용	2	1.50
음식점	1	2.00
음료판매	1	5.00
제조업	4	3.50
장기요양	2	3.50
서점	1	1.00
기타(영농)	1	3.00
전체**	46	2.76

\*1: 매우 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매우 좋음

\*\*무응답 3개 자활기업, 자료 미제출 1개 자활기업

□ 자활기업에 대한 지역자활센터의 내부 평가

○ 자활기업에 대한 지역자활센터의 내부 평가

- 자활기업에 대한 5점 척도 기준 지역자활센터의 평가는 매출현황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보통(3)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참여자의 열의와 직무능력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표 42>).

<표 42> 자활기업에 대한 지역자활센터의 평가\*

	전체**	지역/광역 기업***		사회적 인증 여부****	
		지역기업	광역기업	사회적 인증	사회적 비인증
전반적인 평가	3.02	3.05	2.75	3.26	2.85
대표의 리더십	3.15	3.24	2.25	3.42	2.96
참여자의 직무능력	3.39	3.38	3.50	3.37	3.41
참여자의 열의(동기부여)	3.43	3.45	3.25	3.37	3.48
매출 현황	2.76	2.79	2.50	2.95	2.63

\*1: 매우 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매우 좋음

\*\*무응답 3개소, 자료 미제출 1개소

\*\*\*지역기업: 미제출 1개, 무응답 2개; 광역기업: 무응답 1개

\*\*\*\*사회적 비인증: 미제출 1개, 무응답 3개

- 지역기업은 매출현황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보통(3)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참여자의 열의와 직무능력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반면에, 광역기업은 참여자의 직무능력과 열의를 보통(3) 이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전반적인 평가, 리더십 및 매출현황에 대해서는 나쁨(2) 수준에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가장 부정적임.
- 사회적 인증 기업의 경우는 지역기업과 유사하게 매출현황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보통(3)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가장 긍정적임.
- 반면에, 사회적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광역기업과 유사하게 참여자의 직무능력과 열의를 보통(3) 이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전반적인 평가, 리더십 및 매출현황에 대해서는 나쁨(2) 수준에서 평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역기업과 사회적 인증기업은 매출, 광역기업과 사회적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은 리더십과 매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표 43> 업종 기준 자활기업에 대한 지역자활센터의 평가

업종 구분	기업수	전반적인 평가	대표의 리더십	참여자의 직무능력	참여자의 열의 (동기부여)	매출 현황
청소	17	3.18	3.24	3.06	3.24	2.76
집수리	9	2.44	3.00	2.89	3.44	2.44
간병	2	3.00	3.00	3.50	3.00	3.50
택배	6	3.33	2.83	4.33	3.83	3.33
폐자원재활용	2	2.00	2.50	3.50	2.50	1.50
음식점	1	2.00	4.00	4.00	4.00	2.00
음료판매	1	4.00	4.00	5.00	5.00	5.00
제조업	4	3.25	3.50	3.25	3.50	2.75
장기요양	2	4.50	4.00	4.00	4.00	3.50
서점	1	2.00	3.00	4.00	4.00	1.00
기타(영농)	1	3.00	2.00	4.00	3.00	2.00
전체**	46	3.02	3.15	3.39	3.43	2.76

\*1: 매우 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매우 좋음

\*\*무응답 3개 자활기업, 자료 미제출 1개 자활기업

○ 업종 기준 자활기업에 대한 지역자활센터의 내부 평가

- 전반적인 평가는 ‘장기요양’이 4.50으로 가장 높았으며, ‘폐자원재활용’이 2.00점으로 가장 낮음(<표 43>).
- 자활기업의 수가 가장 많은 ‘청소’와 ‘집수리’업종은 각각 3.18과 2.44로, ‘청소’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집수리’는 평균보다 낮음.
-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에서는 ‘장기요양’과 ‘제조업’이 각각 4.00, 3.50으로 가장 높으며, ‘청소’는 3.24로 평균 이상이고, 집수리는 3.00으로 평균보다 낮으며, ‘폐자원재활용’이 2.50으로 가장 낮음.
- 참여자의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택배’는 4.33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집수리’가 2.89로 가장 낮아서, ‘집수리’업종이 가장 숙련을 요하는 업종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청소’도 3.06으로 전체 평균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있음.
- 참여자의 열의에 대한 평가에서 ‘장기요양’과 ‘택배’가 각각 4.00, 3.83으로 가장 높으며, ‘폐자원재활용’이 2.50으로 가장 낮으며, ‘청소’는 3.24로 전체 평균인 3.42보다 낮은 수준이며, ‘집수리’는 3.44로 평균 수준임.
- 매출에 대한 평가에서는 ‘간병’과 ‘장기요양’이 3.50으로 가장 높으며, ‘폐자원재활용’이 1.50으로 가장 낮음.



□ 자활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자활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지원

- 2014년 상반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활기업들을 대상으로 자활기업의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을 확인한 결과, ‘공공시장 참여 지원’을 선택한 경우가 26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대표의 리더십 배양을 위한) 인적 자원 지원’을 선택한 경우가 9개였음(<표 44>).
- 광역기업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자활기업은 ‘공공시장 참여 지원’을 향후 생존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1순위로 제시한 반면에, 광역기업의 절반은 대표의 ‘리더십 배양이라는 인적 자원 지원’을 1순위로 제시하고 있음.

<표 44> 자활기업의 생존을 위해 향후 필요한 지원의 종류 (1순위)

후원기관	전체*	지역/광역 기업**		사회적 인증 여부***	
		지역기업	광역기업	사회적 인증	사회적 비인증
인적 자원 지원(대표의 리더십 배양)	9	7	2	4	5
인적 자원 지원(참여자의 직무능력 향상)	1	1	0	1	0
인적 자원 지원(동기부여/교육)	0	0	0	0	0
사업비(상환) 지원	2	2	0	0	2
(사무실, 또는 작업실) 공간 지원	3	3	0	2	1
사회적 인증 지원	3	2	1	1	2
기술 지원	1	1	0	0	1
공공시장 참여 지원	26	25	1	11	15
법적 지원	0	0	0	0	0
기타(사업비 무상 지원)	1	1	0	0	1
전체	46	42	4	19	27

\*무응답 3개 자활기업, 자료 미제출 1개 자활기업

\*\*지역기업: 미제출 1개, 무응답2개; 광역기업: 무응답 1개

\*\*\*사회적 비인증: 미제출 1개, 무응답 3개

<표 45> 업종 기준 자활기업의 생존에 필요한 지원의 종류

업종 구분	인적 자원 지원 (대표의 리더십 배양)	인적 자원 지원 (참여자의 직무능력 향상)	사업비 (상환) 지원	(사무실 또는 작업실) 공간 지원	사회적 인증 지원	기술 지원	공공시장 참여 지원	기타	전체
청소	3	1	1	0	2	1	9	0	17
집수리	0	0	0	0	0	0	9	0	9
간병	1	0	0	0	0	0	1	0	2
택배	3	0	0	0	0	0	3	0	6
폐자원재활용	0	0	1	0	0	0	1	0	2
산모도우미	0	0	0	0	0	0	0	0	0
음식점	0	0	0	0	0	0	0	1	1
가사도우미	0	0	0	0	0	0	0	0	0
음료판매	1	0	0	0	0	0	0	0	1
제조업	0	0	0	2	1	0	1	0	4
장기요양	0	0	0	1	0	0	1	0	2
서점	0	0	0	0	0	0	1	0	1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	0	0	0	0	0	0	0	0	0
기타	1	0	0	0	0	0	0	0	1
전체	9	1	2	3	3	1	26	1	46

\*무응답 3개 자활기업, 자료 미제출 1개 자활기업

- 업종 기준 자활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업종을 기준으로 자활기업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종류를 확인하면, ‘청소’, ‘집수리’, ‘택배’ 업종은 ‘공공시장 참여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많음 (<표 45>).
  - 반면에, ‘간병’, ‘택배’, ‘음료판매’업종의 기업들은 ‘(대표의 리더십 배양을 위한) 인적 자원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 IV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

### 1. 자활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지원 방안

#### □ 자활기업 성공의 의미

##### ○ 자활사업의 현실

-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과 취·창업의 기회를 갖게 하는 우리나라의 근로연계복지(work-fare)제도임.
- 자활사업의 성공여부는 결국 참여자들이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자립·자활하는 것이지만,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거의 모든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높은 연령, 기술력 부족, 자본 부족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창업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 자활기업과 자활사업 성공

-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빈곤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인 자활사업의 성공여부는 결국 취·창업 지원 및 이들이 취업하고 창업한 기업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자활기업의 창업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자활사업의 성공과도 관련됨.

#### □ 자활기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원

##### ○ 보건복지부의 자활기업 지원

- 보건복지부는 자활기업에게 기본 2년, 최장 3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함.
  - 창업 지원
  - 사업자금의 융자
  - 국·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 보건복지부 자활기업 지원의 한계

- 자활기업이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활기업이 시장에서 자신의 힘으로 생존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특히, 시장상황의 변화와 사회적경제의 성장에 따라 자활기업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끊임없이 변화시켜야만 하며, 또한 지자체와 자활사업 지원체계인 지역/광역/중앙자활센터도 지원체계를 변화시켜야 함.

□ 자활정책연구소의 자활기업 지원 방안 제안

○ 자활정책연구소의 여섯 가지 자활기업 지원 방안 제안

- 자활정책연구소는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여섯 가지로 제안하고 있음(김정원 외, 2012).

○ 첫째, 자활사업제도의 변화

- 탈수급된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 및 자활사업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변화’, 자활기업창업 제한에 대한 검토 및 지원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밀어내기식 창업을 유도하는 자활기업 창업에 대한 기간 변화’, 자활기업 생산품에 대한 인증체계 구축과 공공구매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활기업 지원체계 강화’, 희망리본 프로젝트나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한 취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같이 자활기업 창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자활사업제도의 변화”

○ 둘째, 지자체의 명시적인 제도적 지원

- 자활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취약한 책임성을 극복하여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사용 및 자활기업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같은 “지자체의 명시적인 제도적 지원”

○ 셋째, 민간부문 전달체계간 역할 분담

- ‘창업준비, 창업·창업 후 초기 운영, 성장’이라는 자활기업의 각 단계에서 중앙/광역/지역 자활센터라는 “민간부문 전달체계간 역할 분담”

○ 넷째, 자활기업의 다양한 경로 모색

-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라는 자활기업의 경로를 ‘incubating 프로그램에서 바로 창업’이나 ‘자활근로.희망리본 프로젝트를 통한 개인 창업’, 또

는 ‘자활근로를 통한 공동 창업’,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등을 통한 창업’과 같이 “자활기업의 다양한 경로 모색” 및 각 경로에 적합한 맞춤형 인증과 지원체계 구축

○ 다섯째, 프랜차이즈화의 추진

- 영세자영업자 창업방식을 탈피할 수 있도록 차량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두레마을이’나 돌봄사회서비스 업종의 ‘(주)온케어’와 같이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제3섹터에서 영리 부문의 프랜차이즈링 테크닉을 이용해 규모화를 추구하는 조직 방식을 적용한 자활기업의 사회적 프랜차이즈링(social franchising)을 위한 “프랜차이즈화의 추진”

○ 여섯째, 자활기업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창출

- 지역시민사회의 조직화, 지역의 연구자 및 오피니언 리더들의 조직화, 전문가들의 조직화 등과 같이 자활기업에 우호적인, 즉 “자활기업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창출”

## 2. 인천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

### □ 자활기업에 대한 기존 지원 및 지원방안의 한계

#### ○ 보건복지부 지원 방안의 한계

- 보건복지부가 자활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지역, 업종, 사회적 인증 여부 및 지역/광역 자활기업 구분 없이 전국의 모든 자활기업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지원임.
- 보건복지부의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은 자활기업의 창업과 초기 운영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은 아님.

#### ○ 자활정책연구소가 제안한 자활기업 지원 방안의 한계

- 보건복지부의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과 달리 자활정책연구소는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자활정책연구소의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사회적경제의 맥락에서 전국의 모든 자활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지원방안임.
- 하지만, 인천 자활기업들에게는 자활정책연구소의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일반적인 방안이어서, 인천 자활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상대적으로 구체적 방안이 제안될 필요가 있음.

### □ 인천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 모색

#### ○ 인천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제시의 출발점

- 자활정책연구소가 제안한 여섯 가지 자활기업 지원방안을 앞서 분석한 인천 광역시 자활기업의 성장, 현황, 사회적 자원 및 전망을 연결할 경우 일반적이지만, 인천광역시에 적합한 자활기업 지원방안이 제시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인천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제안될 수 있음.

#### ○ 첫째, 자활기업의 범주화 및 범주별 사회적 자원의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 자활기업을 둘러싼 사회적 자원을 자활기업의 범주별로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사회적 자원 연계의 다양화’가 필요함.
- 이는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모든 자활기업을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지자체차원에서 자활기업을 지역/광역이라는 활동범위, 업종, 사회적 인증 여부, 소재 지역 및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비율 등을 기

준으로 범주화하여, 각 범주에 적합한 자원의 연계가 필요함.

- 예를 들면, 청소의 경우 사회적 인증을 받은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공공 시장 참여가 활발하지만, 고용한 인력 중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비율은 낮으며, 특정한 한 개 업체가 전체 업종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대규모라는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청소업종의 특성은 간병이나 장기요양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반면에, 집수리업체의 경우 최근 합병을 통해 협동조합으로 탄생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과도 어느 정도 연관되는 특성이 있으며, 택배의 경우도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과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농장은 특성상 생산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류의 다양화도 어렵고, 판로도 개척하기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음.<sup>4)</sup>

○ 둘째, 조례에 자활기업 지원 명시 및 지자체가 구매하는 공공시장에 자활기업의 참여를 위한 지침서 개발

- 자활기업은 기업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특성상 일반 시장에서의 생존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공공시장에의 참여를 통해 생존가능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지되는 것임.
  - 결국,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지원의 하나는 지자체가 자활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는 자활기업들이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지원종류이기도 함.
- 지자체가 자활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장이나 담당 공무원의 선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활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지원이 조례에 규정될 때 누구나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을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도 서울특별시와 마찬가지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지만, 자활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 중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항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
  - 자활공동체의 운영 지원,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등의 내용 추가된 “자활사업지원”

4) 이러한 맥락에서 자활기업과 사회적 자원이 분포된 지역사회의 환경을 연결하여 분석한 ‘고성지역자활센터·강원광역자활센터·사회투자지원재단’이 2013년에 출간한 “고성지역자활센터의 지역사회영향조사연구”는 하나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서울특별시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는 “광역시자체 인증 자활기업”
- 또한, 인천광역시 조례 중 제5조 ‘자활사업 지원’ 의 제2항 중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보다 구체화하여 자활사업담당 공무원들이 자활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2.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지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 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4. 조달구매 시 자활 생산품의 우선 구매
- 이와 같은 조례에 의한 규정화와 함께 담당공무원 및 자활기업 관련자들이 지자체가 구매하는 공공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지침서 개발도 필요함.
  - 즉,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예산 분석을 통해 자활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공공시장의 규모를 확인하고, 이러한 공공시장에서 자활기업의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함.<sup>5)</sup>
- 셋째, 다양한 업종에서 자활기업의 사회적 인증 획득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성화
  -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 사회적경제영역이 활성화되고, 또한 몇 가지의 가치 「사회적 경제에 관한 기본법 안(案)」이 발의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기업인 자활기업이 기본적으로 공공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증을 받는 노력이 필요함.
  -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회적 인증을 받아야만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다양한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공공시장에서의 매출증가가 가능함.
    -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중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자활기업들이 사회적 인증을 받은 이유도 공공시장에의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였음.

5)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의 자활기업 공공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공예산을 분석하여, 진입이 가능한 공공시장을 확인하고 진입을 위한 지침을 작성한 2013년의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사회적경제 자활기업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은 하나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표 46> 사회적 경제에 참여 중인 자활기업

업종		전체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청소	기업 수	9	2	6	1	-
	인원(명)	239	30	204	5	-
집수리	기업 수	3	2	-	1	-
	인원(명)	22	10	-	12	-
간병	기업 수	1	-	1	-	-
	인원(명)	71	-	71	-	-
음료판매	기업 수	1	-	-	-	1
	인원(명)	4	-	-	-	4
제조업	기업 수	3	2	1	-	-
	인원(명)	21	11	10	-	-
장기요양	기업 수	1	-	1	-	-
	인원(명)	101	-	101	-	-
서점	기업 수	1	-	1	-	-
	인원(명)	1	-	1	-	-
전체	기업 수	19	6	10	2	1
	인원(명)	459	51	387	17	4

- 2014년 상반기 현재 운영 중인 전체 자활기업 50개의 38%인 19개소가 사회적 인증을 받았으며, 인력규모를 제출한 46개 자활기업의 전체 인력 598명의 76.8%인 459명이 사회적 인증을 받은 자활기업에 참여 중임(<표 46>).
  - 사회적 인증의 대부분은 ‘사회적 기업’으로 전체 19개소의 52.6%인 10개소, 인력은 84.3%이며,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할 경우 전체 자활기업의 84.2%, 인력의 95.4%임.
- 이러한 규모는 인천 전체 사회적 기업 55개소의 18.2%인 10개소, 예비 사회적기업 71개소의 8.5%에 해당되며, 또한 인천 전체 (예비) 사회적기업 126개소의 12.7%인 16개소, 인력 약 1,600명의 28.7%임.
  - 반면에, 자활기업 중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인천 전체 협동조합 132개소의 2.3%인 3개소, 인력 61,653명의 0.03%인 21명임.
- 사회적 인증을 받은 기업의 규모나, 참여인원의 규모의 관점에서 자활기업의 사회적 인증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자활기업에서 사회적 인증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임.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청소, 간병, 장기요양 등 공공시장의 영역이 크고, 자활기업 참여인원이 많은 자활기업은 많은 경우가 이미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된 상태임.
  - 이에 따라, 이들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금 제공이나 공공시장에의 진입에서의 배려가 이미 제공되고 있음.

- 문제는 지원금이 제공되지 않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결성이나, 타 업종에서의 사회적 인증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임.
  - 이에 따라, 자활기업의 사회적 경제로의 적응은 다양한 업종에서 자활기업의 사회적 인증 획득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함.
  - 특히, 지역자활센터나 대표자 본인이 운영의 책임을 지는 법적 형태가 아니라, 참여자 모두가 조합원이 되어 모두 함께 책임을 나누어 가지면서 본인이 참여하는 자활기업에 대한 열정과 책임이 강화되는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의 전환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넷째, (전자)바우처와 결합된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기존의 자활 사업을 자활기업으로 창업
  - 지난 2001년부터 인천지역 자활기업의 설립 및 폐업/합병 과정을 파악한 결과 음식점은 지속가능성이 희박함.
    - 자영업, 일반 시장, 지역 상권, 치열한 경쟁 등 운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을 가진 참여자들이 음식점에서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음.
  - 인구사회학적 환경이나 정책변화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자활 기업 창업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의 사업과 관련한 택배나 집수리뿐만 아니라, 최근 성장하는 간병이나 장기요양과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자활기업은 어느 정도 지속가능하다고 평가받고 있음.
  - 2014년의 경우, 몇몇 지역자활센터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장애아 동정서지원서비스’를 사업으로 개발하였음.
    - 인천의 도심지역 몇 개 구에서 시작한 사업은 2015년도에는 인천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전국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인천의 사례를 주의 깊게 관찰 중임.
  - 이러한 의미에서 (전자)바우처와 결합된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기존의 자활사업을 자활기업으로 창업하는 노력이 필요함.
- 다섯째, 자활기업 대표뿐만 아니라 참여자 모두의 직무능력과 책임감 제고
  - 지자체와 자활전달체계의 다양한 지원은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필요조건임.
  - 자활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무엇보다도 넓은 의미에서 자활기업 자체의 경영이 활성화되어야 함.
    - 자체경영의 활성화는 인적자원의 개발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음.

- 자활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지원 종류를 묻는 조사항목에서 가장 많은 것은 공공시장 참여 지원이었고 그 다음은 ‘자활기업 대표자의 리더십 배양을 내용으로 하는 인적 자원 지원’이었음.
  - 자활기업의 창업이 참여자의 입장에는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참여자와 대표자가 창업 후 운영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한 경우 경영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음.
  - 참여자는 대표에게, 대표는 지역자활센터에 책임을 미루는 것이 어느 정도 현실일 수는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법적 구조는 대표자가 경영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자활기업 대표자의 리더십 배양을 내용으로 하는 인적 자원 지원’이 자활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 중의 하나임.
  - 또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결성이 확대된다면, 리더뿐만 아니라 참여자 모두의 직무능력과 책임감 제고가 필요함.
- 여섯째, 자활기업 범주화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서 ‘지자체-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 자활기업은 교육, 사업지원·자문 및 후원에서 지역자활센터를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여기고 있음.
    - 창업과 운영 및 인력구성 등 자활기업의 모든 것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고 가까워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지역자활센터이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에 적응해야 하듯이 지역자활센터도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자활정책에 적응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소위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될 예정이고, 「자활사업전환모델 개발 시범사업」 및 저소득·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프로그램들을 하나로 묶는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의 도입 등의 자활을 둘러싼 정책의 변화는 지역자활센터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제는 체계화가 필요함.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활기업을 지역/광역이라는 활동범위, 업종, 사회적 인증 여부, 소재 지역 및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율 등을 기준으로 범주화하고, 범주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지역자활센터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역

자활센터와 함께 할 경우에만 가능함.

- 즉, 자활기업 범주화 및 맞춤형 지원체계는 광역자활센터가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의 도움을 받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자활기업에 대한 실제 지원은 지역자활센터가 지자체와 함께 하는 역할분담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자활기업 범주화 및 맞춤형 지원체계가 정립될 경우 사회적경제에 적합한 지역/광역 자활센터간 역할과 기능 정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문헌

- 김정원 외, 사회적 경제와 자활기업, 자활정책연구소, 2012
- 고성지역자활센터.강원광역자활센터.사회투자지원재단, 고성지역자활센터의 지역사회영향조사연구, 2013
- 보건복지부,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 2012
- 보건복지부, 2014 자활사업 안내(I), 2014
- 서울광역자활센터, 2013 사회적경제 자활기업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 2013
-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 정관영, 이제는 사회적경제이다, 2013